# 第278回國會 (定期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8年9月18日(木)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통일부 소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6.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審査된案件**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 2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 2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2
   가, 통일부 소관
6.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 6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 6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 6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6
   가. 통일부 소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김소남・김학용・김희철・박종희・송민순・송영선・신지호・신학용・안상수・유기준・이범관・이한성・정두언 의원 발의) ····· 57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용구・정희수・이상민・양승조・박상돈・이진삼・심대평・권선택・류근찬・이재선 의원 발의) ····· 57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박진**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결사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만 상정할 수 있고 기타 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될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4항 그리고 제5항의 법률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위원회 운영일정 등을 감안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통일부 소관**

(10시16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에 관한 결산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난 후에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하중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북핵 문제는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해결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남북관계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일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활성화, 대북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폭 확대 등을 통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대북정책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분석을 위해서 북한 보도매체를 통한 확인, 전문가 협조, 새터민 및 방북자 수시면담, 해외 연구기관과의 정세평가회의 개최 등 다양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주변국가 정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개성공단, 남북교역 등 민간경협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었습니다.

2005년 남북교역액이 연간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7년에는 1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적 교역도 2006년에 비해서 54%나 증가하는 등 남북교역이 더욱 내실화되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은 1단계 330만㎡에 대한 부지조성, 정배수장, 폐기물 매립장 등 대부분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분양도 2007년 6월에 완료되었고 공장건축 및 입주가 꾸준히 진행되어서 본격적인 생산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남북 간에도 통행·통관·검역·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 출입 통행량은 개성공단건설 본격화 등으로 육로 통행인원이 전년대비 52%가 증가한 106만여 명에 이르렀고 차량은 48%가 증가한 18만 3500여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도라산 물류센터를 완공하였으며 동해선 물류센터 건설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역사, 학술, 종교,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지원사업은 북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2007년 3월부터 재개하였고 대면상봉행사를 두 차례, 화상 상봉 행사를 세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식량, 비료, 보건의료,영유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남북피해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과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새터민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국내입국 새터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하나원 수용규모 확대를 위해서 하나원 증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북회담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남북총리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총 55회의 분야별 남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운영, 사이버통일교육 확대, 찾아가는 통일교육 등을 통해서 수요자 지향형 교육으로 대상을 다변화하고 통일문화 페스티벌, 체험학습,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통일교육교재 개발 보급 등을 통해서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7년도의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은 6098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5000억 원을 제외하면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액은 1098억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88억 1000만 원, 전용 14억 1000만 원 등의 증감사유로 인해서 예산현액은 6186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99.4%인 614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6%에 해당하는 13억 2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1억 9899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보다 9689만 원이 많은 2억958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계정으로 정부출연금 5000억 원, 여유자금 회수 5942억 원 등 1조 2636억 원을 조성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에 2272억 원,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1725억 원, 대북 교역 및 경협투자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566억 원, 식량차관 등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에 2238억 원 등 7157억 원을 사용하고 5436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경수로계정으로 공자기금예수금 5216억 원, 여유자금회수 1339억 원 등 6595억 원을 조성하여 6314억 원을 사용하고 281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2007년 결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결산개요 보고서로 준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통일부 업무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중태** 기획조정실장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비 및 기금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현황, 일반예산 결산, 남북협력기금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현황은 장관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예산 결산의 예산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즉 일반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6098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중 계속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및

2006년도에 이어 지속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서 32건의 사업에 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통일기반 조성 및 국정과제 수행 등을 고려 필수 소요경비 위주로 6건의 사업에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당초 편성액은 1억 9900만 원이었으나 임대료 수입 등 재산수입의 증가로 징수결정액은 2억 9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를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6098억 4800만 원이었으나 예비비 88억 10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예산현액이 6186억 6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6148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가 집행이 되었고 차년도 이월액은 25억 1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이월액 25억 1200만 원과 불용액 13억 2800만 원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내역 25억 1200만 원은 하나원 본원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관련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두 차례 유찰이 됨에 따라서 개성공단 RFID태그 구매 지연 관련해서 1억 4500만 원,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6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의 13억 2800만 원의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평양국제전람회 참가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6200만 원을 비롯한 계획변경 및 취소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직원숙소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 미집행액 5900만 원을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정부 세출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5억 7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경쟁입찰 전환에 따른 차액 2100만 원을 비롯한 사업별 집행잔액은 4억 4100만 원이 되겠고, 기타 국가기록원의 통합발주로 인한 기록관리시스템경비 미집행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이용 및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일부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전용은 14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직원 명퇴수당과 관련된 비용을 비롯한 인건비 부족액 충당 5억 8200만 원, 출입사무소 홈페이지 구축 및 공용야드 활용방안 용역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등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한 2억 95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5억 9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기타 회의실 보수공사 4100만 원 등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결산과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별 집행내역은 새터민 후원 및 청소년학교 지원을 위한 35억을 비롯한 8건에 대해서 104억 6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비비 지출은 8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행사경비가 25억 9900만 원, 새터민 정착지원 관련해서 59억 700만 원의 예비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하나원 입소인원을 168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2530명이 입소함으로 인해서 850명 초과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수입은 1조 9230억 원이며 이 중 1조 3513억 원이 지출되고 5717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을 하였습니다. 그중 남북협력계정은 수입액 1조 2635억 원 중에 7199억 원이 지출돼서 65.4%를 집행하였고, 경수로계정은 총수입액 6595억 중에 98.9%인 631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수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계정의 수입액 1조 2635억 원의 내역은 여유자금회수 594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억 원, 공자기금 예수금 630억 원, 공자기금 예탁금 회수 600억 원, 운용수익 등 기타수입금이 4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수로계정의 수입액 6595억 원의 내역은 공자기금 예수금 5216억 원과 여유자금회수 1339억 원, 운용수익 등 기타수입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지출 결산입니다.

남북협력계정의 지출액 7199억 원의 내역은 사업비 7157억 원, 공자기금 이자상환 23억 원, 기금관리비 19억 원이 되겠으며 경수로계정의 지출액 6314억 원의 내역은 공자기금 원금상환 5330억 원, 이자상환 9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별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인적교류지원은 남북한 주민 왕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현액 30억 원 중에 56.4%인 17억 원을 집행하고, 북한 청소년축구대표단 방한과 관련된 경비 미정산금액 1000만 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의 문화·학술·체육행사 경비지원 사업으로 계획현액 100억 원 중에 69%인 69억 원을 집행하고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등 5건에 대한 사업비 4억 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현액 468억 원 중에 57.6%인 269억 원이 집행되고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등 3건에 대한 186억 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 등 직간접 경로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으로 계획현액 3036억 중에 74.8%인 2272억 원을 집행하고 대북 수해지원 등 37건에 대한 집행잔액 296억 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21쪽의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이 되겠습니다.

대북 식량차관 등 인도적 차원의 자금융자를 통해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계획현액 1565억 원 중에 89.8%인 14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역·경협 손실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북 교역 및 경협투자 기업에 대한 비상위험에 대한 손실보조 사업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말까지 35건, 942억 원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마는 손실보조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금융기관 지원은 남북 당국 간 청산결제 및 북한원화 인수 및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환차손 보전 등 손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4년 청산결제에 대한 세부합의 미체결로 2007년까지 집행 금액은 없습니다.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제협력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계획현액 3353억 원 중에 51.5%인 1725억 원을 집행하고 동해선 공용야드 건설 등 8건에 대한 사업비 669억 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교역·경협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교역 및 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사업으로 계획현액 1033억 원 중에 54.8%인 566억 원을 집행하고 개성공단 전력 및 통신 기반시설 공사 대출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362억 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북 자재장비 차관 및 경공업 원자재 차관 등 경제적 차원의 자금융자를 통해서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계획현액 1034억 원 중에 80.6%인 83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여유자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 5717억 원은 08년 사업비 등으로 4877억 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840억 원은 결산잉여금으로 2009년도 사업비에 투입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비비 및 기금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심의에 바쁘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민주평통 업무현황 보고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익한 고견과 정책제안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협의회운영비 지급통장 이자발생액 200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07년도 예산은 세출예산액이 137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132억 1500만 원, 96.2%를 집행하고 5억 1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사무처 67명 공무원 인건비로 총 3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제13기 자문회의 구성, 국내 출범회의와 해외 권역별 출범회의 개최,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등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1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임·분과위원회 운영, 통일 여론수렴 등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통일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사업으로 6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월간 「통일시대」발간, 자료지원, 온라인 통일활동, 자문위원활동 지원 등 적실성 있는 자문·건의와 통일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위한 자문위원 역량 함양 사업으로 8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18개 지역회의와 232개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화통일포럼, 해외전문가포럼, 현지 통일여론 형성활동 등 민주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통일기반 조성활동에 총 5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전산운영, 청사관리, 기관운영, 혁신과제 추진 등 경상적 운영경비로 1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6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액 300만 원, 총액비대상기본경비 부족분 1000만 원, 국내출범회의 개최 경비 부족분 2억 80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불용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5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이며 정부방침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액 2억 39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2억 2000만 원, 계획변경 및 취소 등 5300만 원, 기타 순수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 결산개요 보고로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개선을 요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올린 2007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

### 6.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0시42분)

**○위원장 박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어제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국정감사계획서 중에 아프리카 중동반의 감사대상기관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오만 대사관 및 주카타르 대사관 대신에 주이란 대사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대상기관 변경에 따라서 증인 출석 요구 등의 사항도 변경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통일부 소관**

**○위원장 박진** 그러면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성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요약 검토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입니다.

통일부 소관 세입 부문에서는 예산액 대비 9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주로 남북출입사무소 건물임대료, 통일교육원 비합숙대상 교육생 숙박료 등이 초과 수납된 데 기인합니다.

이 중 교육생 숙박료는 당초 250만 원이었으나 대폭 증가한 22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교육대상자의 생활관 이용은 본인 희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추계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금액의 과소 여부를 떠나 수납실적에 기초한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통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중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사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수출계약 등 판로 개척과 개성공단 사업홍보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72.9%인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전시회 참여 지원은 크게 정부홍보관을 통한 참여 지원과 개별 참여 지원으로 구분되며 개별 참여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의 전시회 지원 현황을 보면 네 차례에 걸쳐 직접 지원하였던바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상이전을 통해 지원하여야 함에도 운영비를 통해 지원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방식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지원실적을 보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바 여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2007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2935만 불의 유효상담과 1650만 불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7년 프리뷰 인 상하이 등 3건의 전시회 참가의 경우 실제 수출계약 실적이 없는바 그 효과성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배정액은 88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98.9%가 집행되었는바 이와 같이 예비비를 많이 지출한 것은 새터민 정착지원, 남북회담 행사지원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새터민 정착지원금의 집행내역은 새터민 교육훈련 4억 6500만 원, 정착금 지급 54억 4200만 원 등으로 새터민 정착지원에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2007년 예산편성 당시 하나원 입소 기준인원은 1680명이었으나 실제 입소인원이 기준인원보다 850명 증가한 2530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기준인원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는 경우 예비비 배정을 통한 재원조달은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남북협력기금 중 수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협력계정의 2007년도 조달계획액은 총 1조 394억 9200만 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은 1조 2635억 5800만 원으로 121.6%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의 주된 이유는 여유자금 회수액이 2007년도 계획액보다 211.1% 초과 달성되었기 때문으로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의 2007년도 수입실적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 계획액을 1600억 원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기금의 지출실적을 보면, 사업비 집행실적이 계획 대비 66.7%에 불과하고 전체 남북협력계정액의 43%에 달하는 금액이 여유자금 운용으로 집행되는 등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2007년도 말인 12월 11일 공공자금관리기금 630억 원의 예수를 결정하여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여유자금의 초과 회수와 계획된 사업의 부진 집행을 감안해 볼 때 연도 말에 불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한 정부의 기금운용 방식은 시

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부분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도적 지원사업의 2007년도 현액은 3035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74.8%를 총 96건의 사업에 집행하였고 8.9%를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분배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위해 41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5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96건의 사업 중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건수도 55건에 이르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교역·경협자금 대출사업은 대북 교역 및 경제협력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의 대출을 통해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계획현액은 1032억 5600만 원이었으며, 그중 54.8%인 566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5%는 이월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경우 건당 50억 원 이상, 교역자금대출은 건당 30억 원 이상이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102건의 교역·경협자금 신규대출 중 교추협의 의결을 받은 건수는 2건에 불과한바 교역 및 경협자금 대출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추협의 의결 기준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세입세출결산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협의회 활동에 2005년도에는 63억 2900만 원, 2006년도에도 62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3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통일업무는 국가사무라는 점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이유로 2006년도부터는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결의하였고 그 결과 2007년도의 예산지원은 전년도 대비 36.1% 감소된 39억 6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통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2005년 및 2006년의 정부지원 예산은 지자체 지원금액보다 약 20억 원이나 적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인 2007년도에서야 전년 대비 22.1% 증가된 5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충분치는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사무처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일부 기관보고, 업무현황보고 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신병, 그리고 북한의 내부 정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보고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서 북한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신병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에서 장군님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병상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후계구도와 관련해서 병상통치가 장기화되면 군부가 집단지도체제로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급변사태와 관련된 외신의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난번에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언론보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첩보가 있어서 정밀검증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9월 11일에는 국방부가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동향에 이상 징후가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관리 능력에 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또 정부 관계자들이 정보라고 흘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대내외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께서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보고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별도의 보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지만 그동안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관심을 고려해서 이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위와 통일부의 입장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관련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8월 14일 이후 북한 보도매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동정이 보도되지 않음에 따라서 8월 말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지난 9월 9일 정권수립 60돌 9·9절 행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건강이상설이 증폭돼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된 내용들은 주로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다, 뇌졸중에 걸렸다,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이었고 기타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10일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제게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제까지의 여러 보도들을 정리를 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이 사실인지 그럴 경우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어떤 상태인지, 두 번째는 만일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앞으로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 번째는 그럴 경우에 정부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 9월 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도 대단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월 10일 브리핑에서 '북한 스스로가 말하기 전에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직접 확인해 주지 않는 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북한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정보가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음해, 나아가서 적대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외부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나 대비계획 등의 논의나 보도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그저께 언론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보도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는 더 이상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련 정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문제의 확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의문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면서 이번 문제에 대처하고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조용하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내부 동향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북한 내부적으로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보도매체는 기존과 같이 김정일 중심의 단결과 경제건설, 인민생활 향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나 내부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징후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권 수립 60돌을 맞아 진행된 9·9절 행사도 김정일 위원장의 불참을 제외하고는 예년보다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부터 정권 수립 후 최초로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두 형식의 집단체조인 '아리랑'과 '번영하라 조국이여'가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한꺼번에 개최되지 않았던 중앙보고대회와 열병식도 올해는 9월 8일과 9월 9일에 걸쳐서 두 행사가 모두 개최되었습니다. 9월 8일 중앙보고대회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축하문을 발표한 것이 특이하였습니다. 9월 9일 열병식에는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인 노농적위대와 붉은 청년근위대가 참가하였습니다.

조선신보는 최근에 민간무력인 노농적위대가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에 대해서 대결노선도 준비되고 있음을 시위하는 행사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행사에는 노령의 북한의 고위인사들뿐만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인사들을 비롯해서 당 부장급 전원 그리고 군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해서 지도부의 단합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계기에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과시하는 동향들이 있었습니다. 9월 10일과 9월 14일에는 각각 시리아, 러시아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축전이 발송되었고 추석 즈음에는 혁명열사능, 애국열사능, 만경대 등에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화환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모니터링 활동, 유네스코 사무총장 방북 등 대외동향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양국제영화축전,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등 국제행사들에 대해서도 행사 일정을 공고하는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여러 행사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도 특이동향 사항이 없이 계획된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세와 관련해서 북한 측 관계자들이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의 유포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모습도 일부 관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 동향과 남북교류 동향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북한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관련한 정보가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는 북한이 대내·대남·대외 관계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그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가진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해서 철저히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보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와 추측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이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북한 정세 또 김정일 위원장의 신병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 관련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상찬 위원, 송민순 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지난주에는 모르쇠로 일관하시더니 오늘은 그래도 말씀을 좀 해 주시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김정일이 양치질을 하느냐 혼자 일어나 서느냐 하는 그 사람의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9·9절 행사에 김정일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행사가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돌이켜 보십시오. 정전 이후 50년 동안 북한은 문제가 있을 때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무장간첩을 보낸다든지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권력다툼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9·9절 이후에 이렇게 행사가 많아지고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이미 국민들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행사가 풍성하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은 정말 국민들이 듣기에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는 것, 대단히 역설적인 국가라는 것,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북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탈북자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그럴 경우에 통일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보여 주고 제시를 해야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지, 언제 우리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사지가 정상이냐, 양치질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 동안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최소한의 것은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구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장관께서 외통위에 출석하셔서 우리 외무위원들의 건의 혹은 요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현안보고라는 문건을 통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의 여러 보도들을 정리해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이러이렇다,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언론에 대하여 이렇게이렇게 입장을 강조했다……

저희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정부에서 알고 있는 김정일 이상 동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또 외교안보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대책이나 혹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요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속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우리 외무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보안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회피하고 계십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지난번 외통위에 나오셔서 답변을 했을 때 '이건 알려드릴 수 없다,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관께서 이것이 보도되면, 밖으로 알려지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그 상황에 다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신문에 아주 상세히 났습니다.

그것을 어떤 위원회에서나, 그게 보도가 돼서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고 그것을 담당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작 신문을 보고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신, 또 정부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게 있으면 비공개로 해서라도 우리 통일외무위원회에 알려 달라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신문에 난 얘기만 하고 계시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신문에 난 내용보다 더 정확하지 않은 보고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정보 보고를 줘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유감입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송민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통일부장관님, 정부 내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전체적인 방향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맞다, 지난번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통일부장관께 그렇게 말씀드렸고 통일부장관도 그렇게 대응하셨는데 문제는 통일부가 아니고 지금 이미 서울발 뉴스로 해서 전 세계에 북한문제에 대한 뉴스홍수가 났습니다. 서울발 뉴스가 일부는 실명으로 나오고 일부는 익명으로 해서 고위 정보기관 관계자 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렇게 해서 이미 전 세계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서울발 정보 홍수는 뉴욕발 금융위기설과 같이 합쳐 가지고 우리 한국의 경제·안보 전반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게 통일부면 통일부 차원에서 외교부면 외교부 차원에서 또는 국정원은 국정원 차원에서 국방부는 군사적인 국지전, 도발전 이런 얘기를 하고, 정부는 국정운영 전체를 입체적으로 봐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뭐라고 보고했다 해서 언론이 잘못했다, 언론 자제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언론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어낸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익명 내지 실명으로 이미 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 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송민순 위원** 거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되는 최고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국정을 입체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안보와 경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라가 십자파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상 처음으로 사단급 규모 상륙 훈련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혹시 논의가 됐습니까?

어제 외교부장관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는데 안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송민순 위원** 그러면 그러한 보도도 잘 확인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개념계획 5029 그것은 작전계획하고 다른 것인데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요인을 개입시켜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개념계획이라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의 차원이 아니라 주변국의 작용, 주변국이 할 수 있는 역학관계를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개념계획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는 그 배경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것도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 만약 어떤 유사시가 있다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한국이 주도가 돼서 잘 관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쑥불쑥 나와 가지고 거기에 무슨 상륙 훈련도 나오고 또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이렇게 난무하는 상황을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보고하신 이 상황에 보면 정부 관계자들 익명, 실명으로 나온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태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지금 통일부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생겼다면 그 상황을 앞으로는 예방을 시켜야 되고요, 예방하

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일으킨 장본인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발언하실 분이 네 분 더 계시는데요, 윤상현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홍정욱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이런 순서로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일단은 김하중 장관님의 성의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보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전부 종합 보도세트로 말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보도들이 진짜 봇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쿄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김정일이 쓰러진 것은 테러 지정국 해제 연기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그런 것 가지고 쓰러졌다면 그 수많은 문제 때문에 쓰러졌어도 수십 번은 쓰러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정부 고위 당국자 말씀이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또 미국하고 일본의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창구로 일원화한 곳은 통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양치질이 가능할 정도다'라고 그랬다가 김호년 대변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뒷발을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공개 첩보든 정보든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발설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데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모르쇠로 입을 닫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시켰습니까? 통일부로 일원화시켰으면 통일부에서 나와서 정확한 상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장관님 보고 말씀의 요점은 북한이 직접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문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나 북한 사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북한의 현 사태를 올바로 알아야 정부가 논의하는 향후 대비책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머리를 짜매고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압니다, 장관님.

그래서 장관님께서 적절한 기회에 비공개를 통해서라도 현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선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이때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의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물어도 답변을 안 하실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민순 위원님도 당부하는 차원이셨는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조차도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미국과 일본도 아주 신중히 대응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함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통일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함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민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진작에 했어야 될 입장인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나 질의를 해도 답은 절대로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언급하고 있다는 것보다 몇 배로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뿐만 아니라 NSC를 통한 총체적인 그런, 아까 입체적이라 했는데 정말 총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정일이가 93년 국방위원장에 선출되고 난 뒤에 5년마다 98년 재선출, 2003년 재선출, 2008년에 아직 재선출이 안 됐습니다. 확실하지요? 재선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보면

‘별다른 징후가 없다’ 뭐 이건 눈 감고 아웅 하자는 건데 이런 것도 국회의원들한테 발표를 할 수 없으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없으면 이것도 역시 내부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서의 판단이 돼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통일부가 일전에 한 일주일 전에도 북한의 기아상태를, 식량부족을 물으니까 조선신보 5월 4일 것을 쿼테이션(quotation)을 했어요. 오늘 똑같이 조선신보, 완전히 조선신보가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수준으로, 물론 그쪽에서 조선일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조선일보나 다른 보수지와 같은 정부에 대한 역할을, 북한 정부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조선신보 것을 가져와 가지고 자꾸 쿼테이션 해서 그게 가장 정확한 북한 정보인 것처럼 전달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작계5029 어제 제가 외교통상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비전쟁 북한붕괴방지계획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작계5029와 혼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특정 세력을 염두에 두거나 어쨌든 간에 의도가 뭔지 몰라도 왜곡된 정보를 신문에 아주 크게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직접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면 역시 이 부분도 전체 안보회의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대량탈북을 할 때에 심양 군구한테 붙들려 가지고 다시 강제송환 될 경우 굶어죽어서, 식량이 부족해 가지고 민중봉기로 발전될 경우, 핵통제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그다음에 개성공단이나 나진에 가 있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는 미국 핵 조사단이나 그런 외국 인력들이 급기야 인질이 될 경우 어떻게 구출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을 뭐 비밀사항으로,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할 때에는 비밀사항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이것이 비전쟁 북한붕괴방지계획이라는 것은 알리고, 분명히 알려 가지고 불필요한 동요를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 정말 개념계획을 만들어 놓고 작전계획을 안 만드는 건,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소방관 뽑아 놓고 불이 안 나니까 소방훈련 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논리로 끌어가서 안 되고 정부가 자꾸 우리가 신중하고 모든 대책을 다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국회나 국민이 미덥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과감하게 참 삼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이제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홍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홍정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압니다만 저는 솔직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국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시간을 모르쇠 보고에서 겉핥기 보고로 옮겨 가면서 낭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정말로 지금 현 사태에 어떠한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보교류의 중앙에 서 있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 언론들이 ‘우리 외교안보회의가 실질적으로 외교통상부의 확대간부회의나 마찬가지다’ 이런 보도 많이 한 것 접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통일부가 배제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많고 그리고 오늘 하신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만 보면 정말로 우리 통일부가 일차적으로 수집하는 정보가 하나도 없구나, 정말 우리 통일부가 정보교류와 수집에서 배제되어 있구나, 통일부가 아는 게 없구나라는 그런 인식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가능성 대비 계획 등의 논의와 보도는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들보고 그냥 무조건 정부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동시에 ‘향후 상황에 대해 조용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지금 정말로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위원들이나 언론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

과 7개월 전에 존립의 근거조차 논란의 잣대위에 올랐던 통일부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금강산 피격사건 처리로 온 국민을 걱정시켰던 통일부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무조건 믿으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제안했던 대로 비공개 형식을 통해서 북한 내 동향과 정보수집 체계와 위기대처 체계 이것에 대해서 좀더 핵심적인 내용을 브리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NSC에서 위기관리 관련해서 여러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일부에서 보완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고 그 매뉴얼은 당장 오늘 오후라도 저희 의원실에서 꼭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남경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저는 질의 겸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을 좀 겸허히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교육과학부장관께서 수능 분석 원자료를 그동안 국회에 제출하지 않다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믿고 제출하게 한 그러한 결정을 좀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장관께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보에 대한 수집·관리 중요합니다만 통일과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또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그런 정부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19일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단과 경제·에너지·자원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접촉을 요구해 왔다는 이런 기사인데요. 그리고 정부 대변인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장관께서는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 사실은 저도 외교통상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남경필 위원** 언제 들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어저께 들었습니다.

**○남경필 위원** 어제 몇 시쯤 들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어제 저녁 때쯤 들었습니다.

**○남경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언론에 대고 이러한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에 대고 먼저 밝힐 내용이 아니라 국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언론에 먼저 밝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어제 제가 상임위 중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어제 속기록을 죽 살펴봤는데 장관의 답변 어느 가운데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진상을 좀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북측의 제안을 외교통상부가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또 대변인 브리핑은 몇 시에 했는지, 또 왜 국회에는 알리지 않고 언론에 먼저 이렇게 알렸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초반에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우려와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이 사실도 아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이것은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보고가 그 시간에 전혀 안 됐다는 것은……

만약에 먼저 제의를 받았는데도 이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다음 상임위까지 저에게 외교통상부의 답변을 좀 알려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남경필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예, 두 분 더 계시네요.

문학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문학진입니다.

오늘 현안보고로 돼 있나요? 최근 현안 관련 보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관련한 정보가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있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장관께서, 통일부에서 김 위원장과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어 실력으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필요하면 비공개로 가지고 계신 이 의미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위원장 박진**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현재 제가 돌아가서 한번 다시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비공개로라도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정의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어느 나라건 최고지도자의 건강상태는 굉장한 극비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건강상황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들이 사실은 추측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이 현안보고를 봐도 이런 수준이라면 차라리 답변으로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제가 보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충정을 장관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국정에 잘 활용해 주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최소한 두 가지는 최악의 상황, 나쁜 상황을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풀어가야 될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 북한 정권이 과연 어떻게 이런 점들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만에 하나 건강에 커다란 이상이 없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앞으로 난처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남북이 통일을 향해 가야 되는 긴 여정에 결코 좋게 작용할리가 없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장관께서는 추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범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제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쟁점 문제가 생기면 냄비 끓듯 합니다, 냄비 끓듯.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특히 대북 관계 같은 중요한 문제가 이런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과연 해야 될 문제인가, 우리 국회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무엇이 국익인가, 초당적으로 국익을 따지면 제 생각에는 정부가 왜 이런 정도까지 어려운…… 그때마다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정부가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가, 다 나와 있는 대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냄비 끓듯이 자꾸 부채질을 하면 그럼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국회도 좀 인내심을 가집시다. 좀 참고, 정부가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일부만 가지고 자꾸 질타를 하면, 사람이 먼지 털면 먼지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이 국익인가, 정말로 우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남북 관계에 정말로 진정하게 대처하고 진심 어리게 남북 관계를 걱정한다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는 이런 국회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도 무슨 일이 있으면, 대북지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겠다는데, 하려고 하는데도 북한이 안 받아 줘서 못 했는데 만날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마치 안 하는

데를 갖다가 질타하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국민한테 오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도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에 이건 북한한테 이익 주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부가 그렇게 하느냐', '자, 우리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테니 정부도 우리의 뜻을 충분히 알고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달라, 그러면 국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태 주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공통으로 형성되는 정도면 끝나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든지,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무슨 훈수를 놓고 뭘 하는 건지, 그런 문제를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가려서 우리 외교통상위원회가 그래도 좀 위엄성 있는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현안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또는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허용을 합니다.

다만, 의사 진행과 관계없이 다른 발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혀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제가 그건 중간에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안보고 내용이 워낙 중대한데다가 또 통일부에서 모처럼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언론보도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정부로서는 어느 국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특히 북한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아마 오늘 장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보도나 또 오늘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도의,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대북 관계를 담당한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와 또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북한에 이상 징후가 없고 특이 동향이 없고 예상한 것보다 조용하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병상에는 있지만 지도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도 좋겠습니까? 그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조금 전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선영 위원님, 구상찬 위원님, 송민순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홍정욱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문학진 위원님, 정의화 위원님, 이범관 위원님, 또 위원장님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지적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저도 만일 이 통일부장관 자리에 안 있고 만일 다른 데 가서 있었다면 위원님들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정보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남북 관계를 다루고 또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제가 상대하고자 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적하신 것에는 아주 다 동의하고 저도 깊이 유념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한 그 뜻에 부응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범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모든 나라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기다리고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저희들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른 어느 나

라보다도 높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보도가 나왔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보이지 북한이 확인해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제가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때를 기다리면서 좀더 정확한 정보가 많이 수집이 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될 때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우리 통일부에서 북한을 전담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신 내용 이외에 또 자체적으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공개로 보고하시는 것이 어려우면 비공개 보고를 얼마든지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결산 의결이 있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 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통일부에서는 계속 이 북한 정세에 관한 파악과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필요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의사발언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문학진 위원** 문학진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정부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정기국회 준비하고 또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통일부에 자료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건지 하여튼 통일부에서 매우 늦게 자료를 보내 준다, 그다음에 그것도 받아 보면 내용이 알맹이가 별로 없다, 껍데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고의로 이러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범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초당적·거국적으로 여야 없이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고 매우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오는 자료가 이렇게 껍데기고 또 아주 그냥 꼭 일부러 하는 것처럼 늦게 보내 주고 이렇게 되면 정말 여기서 위원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유념하셔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좀 내용 있는 튼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게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문학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통일부에서는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개 기관에 대해서 결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추가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위원** 김하중 장관님 애쓰셨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기대가 큰 때인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드시더라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칫하면 우리 정부 당국이나 사회가 관망하고 우려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동안 남북 당국 간 합의한 거라든가 민간단체 간 합의한 것을 조기에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리스트, 위험도도 줄이고 또 다채널·다면적 접촉과 접속을 실용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이 1단계 사업을 잘 마쳤고요. 저처럼 국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유치하거나 활동하는 사

람들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한테 아주 매력적인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인력이 한 7000명 이상 당장 모자라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문국현 위원** 이 7000명, 당장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지 않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성을 고려해서 전부 20대 내지는 30대 여성근로자만을 원해서 지금 3만 3000명의 근로자 중에 80%가 20~30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남성이나 연령층을 조금만 높이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희가 앞으로 곧 버스 100대를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근로자 문제도 금년 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고도 제가 보기엔 숙소를 너무 민간에 맡기시지 말고 정부가 건설업도 활성화할 겸 또 중소기업한테 희망을 줄 겸 숙소 건설을 좀 앞당기시고요.

무엇보다도 원래가 약속했던 2단계 250만 평에 대한 착공을 한 번 더 하셔서라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은 어떠신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진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불능화 작업이 잘 진행이 되고 검증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2단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중단이 되고 검증화 문제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2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위원** 그래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약속했던 시기가 원래 8월이고 또 이것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아주 긴박한 상황을 현재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더 전략적으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금강산도 원래 금강산 공동관리기구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구처럼 만드시기로 합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문국현 위원** 예산까지 70억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당국 간 철도용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은 꼭 쓰시겠지요? 원래 목적대로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남북 관계가 잘 진전이 돼서 금강산 문제도 풀리고 하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풀리고 나면 하실 것이 아니라 풀리도록, 전향적으로 피격사태와 공동관리기구 설치를 구별해서 하시면 저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왕 그쪽에 이산가족면회소도 설치를 하셨는데 그 기회도 현재 막혀 있고 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금강산사업인데요, 꼭 좀 금강산 공동관리기구 설치를 하셔서 이 73억의 예산을 쓰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우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당국 간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대로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이미 12월 25일 합의했고 2월 5일에도 합의했던 것인데 장관님께서 먼저 한번 능동적으로 제안하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하여튼 상황을 제가 보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다음에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식량 쪽에 1600억, 비료 쪽에 1000억, 수해에 800억 해서 한 3400억이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산림복구와 수해방지와 농업복구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제일 끝 단계인 식량이라든가 비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원래는 전체 3400억 예산 중에서 한 10%인 340억 정도만 매년 산림복구에 쓴다면 수해방재에도 쓰게 되고 농토복구 해도 되고 결국은 고기를 매번 주는 것보다 고기 낚는,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보다 중장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림복구와 농업복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들도 그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미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문국현 위원**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소규모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워낙 북한의 산림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 그 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문국현 위원** 당국 간 협의는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당국 간 협의와 함께 민간협의를 함께 추진해 주시면 북한 조림과 산림복구, 수해방지, 농토복구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인데요, 통일교육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중요한데 독도 방치해 놓았듯이 북한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통일교육 강화에 대한 구상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들어와서 더욱더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다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문국현 위원** 마무리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진** 예.

**○문국현 위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지금 금강산까지는 많이들, 100만 명 이상이 ―가 봤습니다만 개성을 간다라든가 특히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국제적인 투자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 가볼 수 있게 통일교육예산에도 좀 집어넣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외통위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한다면 계획서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면 통일교육을 어떤 분단의 고착화에 대한 한이라든가 그것의 문제점으로만 끝내시지 말고 서로가 접속이 되고 연계가 됐을 때 어떻게 대륙으로 진출할 것인가, 어떻게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중소기업 2100만한테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다면적 통일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정진석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서 노무현 정부에 끝난 대북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작이 바로 대북 경수로사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정진석 위원**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지금 남은 것은 녹슬어 가는 고철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31일 경수로사업이 공식 종료됐는데 문제는 청산 과정에서 청산비용의 상당 부분을 또 우리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경수로는 남쪽도 북쪽도 모두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은 물론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결국 남북 관계의 실패를 보여 주는,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우울한 상징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는 한전이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정진석 위원** 그런데 경수로사업의 청산비용을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대가로 한전이 넘겨받은 상당 규모의 경수로 기자재 이런 것은 결국 고철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전이 청산비용 부담하는 대가로 넘겨받은 원자로설비와 터빈발전기는 이미 구식이 되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도 없고 차세대 원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비용을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한 8억 3000만 불 정도 됩니다.

**○정진석 위원** 8억 3000만 불,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한 8000억……

**○정진석 위원** 8000억 원 정도, 결국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자재 보관비용도 한 150억 정도가 들고, 금년에도 벌써 60억 정도

썼다고 하고요. 2010년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기자재를 보관할 경우에는 최대한 500억 원 정도를 또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번 청문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북 경수로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산 과정이 매우 의문투성이인데 사실 2002년도에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을 때 미국은 전면적으로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경수로사업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끈질기게 매달려 가지고 사업을 지속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결국 경수로사업은 식물인간 상태로 유지가 됐는데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우리가 매달리면서 그 부담을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우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된 겁니다.

통일부는 2006년 5월에 경수로사업을 공식 종료했을 때 한 장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통일부가. 통일부 보도자료 내용이 이겁니다.

'한전이 손해를 보지 않고 기자재를 활용하게 되어 정부나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부의 공식성명입니다.

한전의 피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 있어요. 이 보도자료 낸 당국자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결위원인데 며칠 전에 예결위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억제하기 위해서 공기업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보조금으로 메워 주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파란이 일었어요. 한전의 적자책임은 경수로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 경수로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께 공식 제안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간에 대북 경수로사업,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 대북 경수로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 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위원장께 공식 제안드리고, 통일부장관은 본 위원에게 통일부 국정감사 첫날 전까지 대북 경수로사업, 특히 청산절차와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지금 이 경수로사업에 들어간 돈이 15억 6200만 달러입니다. 이 중 70%를 대한민국이 부담했어요. 11억 3700만 달러를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1조 3600억 원이에요. 정부는 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2조 7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저는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나라 팔아먹은 죄하고 버금가는 죄입니다. 이것 물어야 돼요. 이것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대북 경수로사업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정말 낱낱이 국민들 앞에 그 실상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일부장관은 국정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진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보고서는 통일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경수로사업 관련한 청문회는 저희들이 간사단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잠깐만, 사실관계를 잠깐 듣고 가시지요. 1분만 앉아 계시지요.

**○정진석 위원** 나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송민순 위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초당적으로 해 나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몇 번의 회의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확립된 사실 위에서 출발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경수로사업 미국에 대해서 70%를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 준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김영삼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리고 경수로사업 신포에서 착공이 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97년……

**○송민순 위원** 97년 8월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송민순 위원** 모든 약속은 그때 다 돼서 소위

제네바합의 때 대표적인 통미봉남형으로 우리는 문밖에서 기다리고 미국과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짐만 짊어진 케이스가 경수로사업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를 제안을 하시면 우리 당에서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서 과거로 회귀해서 또다시 그것이 오도가 되고 우리의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 일이라면 우리는 청문회를 기꺼이 수용을 해서 다 하고, 누가 잘못하고 잘했다 이것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것은 좀 밝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가는 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제가 나가시는 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관계만 말씀……

**○정진석 위원** 사실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또 제가 지적할 것이 있거든요. 끝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리고 개성 말씀이죠, 통일부장관님께서 '핵 문제 진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존경하는 문국현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성사업 자체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장점 그리고 안보적 이익 그리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 협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상호적인 것이지요. 이러한 세 가지 측면, 경제 안보 통일이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핵 문제와 이렇게 단선적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맞다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도 여러 분들이 갖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를 너무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통일부가 좀 줏대를 잡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 불능화가 지금 진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불능화를 중단시킨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중단시킨 것은 잘못인데 그 잘못의 배경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잘 채워서 끌어 나가는 주도의식을 좀 갖고 하자라는 걸 제안했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 문제는 미국 내의 정치상황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통일부가 잘 아셔 가지고 우리 주도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의 경제·에너지 지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의장국 아닙니까? 경제·에너지 지원 위원회에서 우리가 의장국인데, 북한이 이렇게 하자는 것은 6자회담 틀에서 북한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맞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 뭐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 지피지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자기들의 불능화 계산에 의하면 80%가 된 거지요, 80%. 그런데 경제·에너지 지원은 약속의 40%밖에 오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 걸 서로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를 밑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불능화 돼 있는 상태까지만 가더라도 나머지 40%의 경제지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6자회담의 틀에서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건데 저는 남북 간에 이런 형태로라도 접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 가지고 '아, 북한 이렇게 시간 두고 압박하고 하면 그냥 굴복하고 나오는 거다' 이러한 오해 또는 있는 현상을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냉철하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통일부의 일반예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중에서도 새터민 정착사업 이것이 통일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도 보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온 사람들은 직업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사회정착, 쉽게 말해서 물정을 알게 하는 거지요. 물정을 알게 한 그다음에는 의무적으로 직업교육을 시켜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온 사람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했고 법제화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보면 새터민의 실업률은 일반 우리 실업률의 일곱 배 내지 아홉 배 정도 높고 그다음에 사기율, 사기를 당하는 그런 비율도 물경 40배가 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기당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책임 있고 또 시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앞으로 통일을 위한 연습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법안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원 사업 그 자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북한……

**○위원장 박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예.

북한이탈주민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통일부가 좀 마련해 주실 것으로 보고…… 제가 대략 해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동안 1500억 정도를 하면 한 1년 정도, 뭐 기간은 탄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정착과 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금년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몇 말씀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역시 미래지향적인 밀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대북 경수로 사업을 다시 들추고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은 대표적인 대북 실패 사업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제네바 합의가 됐고 그때 70% 동의해 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02년 10월에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을 때 미국은 즉각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중단했습니다. 이행을 중단했어요. 중유 공급 중단했고 경수로 사업 끝맺자고 했어요. 거기에 매달린 게 누굽니까? 우리 정부에요. 그 이후에 추가 비용이 막대합니다. 이걸 어떻게 안 따져 봅니까?

우리가 지나간 얘기 뭐 들추어내 가지고 따지고 벌주자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곱씹어 보고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더 이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간에 대북 경수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30초만……

**○위원장 박진**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지요. 두 분이 한 번씩 얘기하셨으니까……

**○송민순 위원** 이 사실관계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진석 위원** 본 위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했다면 어떤 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린 것인지……

**○위원장 박진**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또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정진석 위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발언한 속기록을 보시고 본 위원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린 것인지를 지적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진**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혹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정부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이나 또 말씀드릴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탈북자들 만나보면요,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탈북을 했으니까 '탈북자'라는 용어는 좋은데 자기들만 특별하게 취급해서 이름을 붙이는 건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터민'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안 쓰는데 정부 보고에도 새터민으로 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새터민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에서도 새터민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탈북자들 만나서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좀 하세요. 하셔서 이 용어 제대로 쓰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이제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다시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원하는 게 많고. 그 사이에, 너무 잘못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부 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돈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 하는 거지만, 예산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그 따뜻한 배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탈북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요, 그에 맞게 좀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남경필 위원님이 먼저 질의도 하셨는데 6자회담에서 에너지 워킹그룹 그게 19일날 열린다는데 장관님께서 아까 언제 들었다고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어제……

**○진영 위원** 어제 저녁에 들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 에너지 워킹그룹의 의장국인데 통일부에서 여기에 멤버 안 들어가 있어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진영 위원**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통일부 경협자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정부는 17일날 외교부에서 발표한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장관님께서 어제 저녁에 들었다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미리 이거 협의 안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그건 발표는 다 됐고요. 제가 외교부 당국자한테서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이 어저께 저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위원** 저는요, 뭐 6자회담 자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워킹그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게 잘 보도도 안 되고 해서 의문점이 많은데요.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서 통일부가 너무 처지는 것도 지금 문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저희들……

**○진영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외교부가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통일부장관 김하중** 협상단장이 외교부의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는 과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통일부가 이런 상황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그 실무그룹에서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잘 보고, 거의 외교부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통일부는 양념으로 하나씩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워킹그룹……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게 6자회담 과정하고 연결이 틀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모든 회담에 다 통일부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돈을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쓰는 거니까……

**○진영 위원** 그래서 만나더라도 이게 6자회담 틀 내에서만 꼭 만난다기보다는 남북 대화를 하는 거니까 통일부도 항상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개성공단에 관해서 인력수급 문제를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장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연령층을 좀 확대하고 버스 100대 정도 지원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거다…… 그런데 그건 금년분에 한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금년분입니다.

**○진영 위원** 금년에 그게 다 해결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해결책이 아닌데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그 해결책은 북한은 계속 저희들보고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사실 숙소를 지으면 돈도 많이 들고, 물론 저희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숙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그 개성공단은 자꾸 정치적 논리로 할 게 아니라요. 자꾸 이게 남북 화해의

상징이다, 뭐 금강산·개성이 이럴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럴려면 그런 정치적 이유를 좀 배제하고요. 과연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 측과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금년만 해도 벌써 부족해 하고 내년부터 당장 닥치는 문제인데 기숙사를 진다고 해도 언제 하겠어요. 내년부터 당장 인력부족이 생겨서 들어가기로 한 입주업체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력 문제 때문에도?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거야 지금 북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인력 문제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진영 위원**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경수로 문제, 아까 정진석 위원님이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지난 일이고 이 계정 빨리 해결해야지요. 정부출연금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자만 자꾸 늘어나고. 저는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해서…… 경수로계정 계속 가져갈 수도 없고 말이지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책을 통일부에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교역자금 대출금 연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통일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이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상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6%, 그러니까 37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체 46%가 연체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9% 정도가 연체하고 있는데, 이건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맞습니다.

**○진영 위원** 이거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 부분?

**○통일부장관 김하중** 일부 업체들은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또 일부 업체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만나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할 수도 없는데 남북관계 상황이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또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계속 지금 이 사업자들하고 협의회는 가지면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지원 차관 문제, 이게 10년 거치 뭐 20년 상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곧 닥치지요, 몇 년 후면?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진영 위원** 상환기일이 닥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이 말이지요. 지금 상환 안 될 건 거의 뻔한 거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물자원으로 가져온다든지, 대체하기로 계약서에는 되어 있는데……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광물자원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4, 5년씩 걸려 가지고 이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하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정부에서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일부는 무상으로 하더라도 또 다른 광물자원으로도, 현물로도 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민주당 신낙균 위원입니다.

금강산 관광객 안전사고는 금강산 관광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이후 총 17명이 금강산 관광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국현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그러나 2006년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체류하고 있는 우리 관광객들과 사업자들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

호할 공공행정기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금강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하려고 2007년 남북협력기금에서 설치사업비 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신낙균 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필요로 대두되었던 것이 실행되지 않고, 예산까지 책정된 것이 되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이유, 또 이 설치를 위해서 통일부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금년에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문제를 북한 측하고 상의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북한이 우리하고 당국자회담을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것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낙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는 대로 이것은 급히, 저희가 시급히 처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올해 다시 7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신낙균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문국현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기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지금도 '풀리면' 그러는데 그것은 국회의 답변, 통일부장관님의 국회 답변으로는 너무 소극적인, 어떤 면에서 저희한테 무책임한 답변으로까지 들리는데요. 그게 주무부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신낙균 위원**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그때 못한 이유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거꾸로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 박왕자 살해사건 같은 게, 했다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 금강산관광은 지속될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강산 사건을 빨리 북한 측하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측하고 남북 당국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조속히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예, 그런데 또 7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쓰시고 다시 편성, 이것은 합당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정부와 여당은 금강산관리위원회를 통일부 산하에 단독으로 설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시려고 하니까 남북 공동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협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북한 측이 동의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북한 측의 입장을 저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우리가 단독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북한하고 접촉이 되면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이렇게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금강산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박왕자 씨 사건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생명이 우주보다 무겁다는 그런 사실에 조금 더 깊은 생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금강산관리위원회 설치하시고 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지난 7월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냉각상태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북핵 사태 이후에도 금강산의 이산가족 상봉은 두 차례나 열린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신낙균 위원** 그런데 지금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 전체, 70세 이상이 이산가족 전체의 72%

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들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쯤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실 수 있는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이런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연로하신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너무나 정부로서는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사업만은 가장 빨리 하려고 최우선순위로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년에라도 북한하고 그런 것이, 대화가 시작이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마무리하시지요.

**○신낙균 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대화 개시, 7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하셔서 국민과 함께 여기에 대한 많은, 이 말씀에 환영도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핵과 연계한 상호주의를 주장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이런 점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간 이 장소 또 꼭 필요한 이 면회소가 흉가로 전락되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방금 전에 끝나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홍정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남경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남북대표단 판문점 접촉 관련돼서 어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시간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진** 아까 오전에 남경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에서 우리 위원회로 팩스 자료가 와서 그 사본을 우리 남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남경필 위원** 온 게 이 내용이 전부인가요?

**○위원장 박진** 예.

**○남경필 위원** 위원장님, 이 서면 내용은 봤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미 15일 날 제의가 왔고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당일날 오전 10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정부 측의 정보 판단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묻는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외교부에 조치를 하시고 다음 위원회 때 그 조치 내용을 알려 주시고 또 외교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조치 내용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보니까 어제 오전 10시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설명으로는 관행상 보고하지 않았다, 과거 세 차례의 회의 때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상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경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제 우리 외교부 보고에서 북한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바로 당일날 오전에 남북대표단 판문점 접촉이라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외교부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에 출석해서 장관이 보고할 때는 그날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또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 박진** 홍정욱 위원님.

**○홍정욱 위원**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NSC 매뉴얼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분명히 국회 담당 사무관하고 저희 보좌관들이 연락을 했을 때 이것이 3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열람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본래 국회의원에게는 2급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뭔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것이 저희 통일부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청와대 상황팀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한테 열람이 가능한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홍정욱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3급 비밀도 전부 열람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밀 제공에 관한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회에도 보안업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정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서울 노원병 출신 홍정욱 위원입니다.

김하중 장관님께 남북협력기금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무단전용 부분입니다.

2005년, 2006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부실공사, 지원금 전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관광사업의 도로공사 두 차례에 걸쳐 93억 원을 무상지원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받았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2005년 12월에 삼지연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역시 부실시공되었다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차 지원이었는데 2006년 2월 18일 2차 추가지원 시 1차 지원 때의 문제점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측 기술자들이 공사현장 협력을 합의서에 명시하거나 혹은 공사 진척됐다는 단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거나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된 후에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지원하신 이유가 뭐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때는 아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북한 측하고 협의를 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답이 안 오는 상황에서 또 북한 측에서 아마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홍정욱 위원** 무단전용, 부실공사의 혐의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 통일부가 나중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홍정욱 위원** 2006년 2월 9일에도 개성기업인 간담 오찬에서 북한 측이 남포항으로 운송되는 물량은 평양에 있는 순안공항 포장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단전용이었는데 전혀 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상 무단전용의 취지를 미리 얘기했는데 지원해 준 것은 무단전용을 방치한 것 아닙니까? 용인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남북협력기금 운영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 외에 자체감사 시행하시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자체감사라기 보다도 저희가 기금을 쓸 때는 몇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이 기금 쓰는 것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없고 이런 기금을 쓸 때마다 전문가들과 관계부서,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는데 사전심사, 사후관리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07년 인도적 지원사업 내역 보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이 90건에 이릅니다. 심사결과 지원 불가로 판정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홍정욱 위원** 이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북한이라는 수혜자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민간단체 선정 과정에서 그 어느 사업보다도 신중하게 심사하는 게 중요하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홍정욱 위원** 그런데 지원 거부된 사례가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과연 정말 이렇게 훌륭한 프로젝트들만 오는 것인가 이것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전문가그룹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간단체들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좀 있었지만 보니까 사실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국감 과정에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실적을 제출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해제 통보하는 제도가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홍정욱 위원** 지금까지 지정해제 통보한 사례가 몇 사례나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하나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한 사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홍정욱 위원** 현재 경협사업자금 대출의 경우에 건당 50억 원 이상, 교육자금 대출의 경우에 건당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관계부처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일부 소관이고, 장관님 소관이고.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최근 3년간 전체 신규 대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5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에 해당돼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했고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받은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통일부장관 김하중**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단지 통일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이 같은 큰 액수들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결 기준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있다라는 것 검토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사후관리 부분에서 기금법 시행령을 보면 기금 사용자로부터 분명히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홍정욱 위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실태를 보면 사용결과 보고서의 제출실적이 63.6%에 불과한데 그 수치가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맞습니다.

**○홍정욱 위원** 예외규정 없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63.6%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동안에는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안 할 경우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이번에 법을 바꾸었습니다.

**○홍정욱 위원** 여러 가지 퍼 주기 논란을 불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심사, 사후관리 그다음에 무단전용금지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원거부 1건 혹은 결과보고서 64% 이런 실적으로는 투명성을 담보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관리로써 투명성을 보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내일 북핵 6자회담 관련해서 남북 간에 실무협의가 열리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북한이 이 정권 들어와서 아주 완강하게 남북 당국자 회담을 거부해 오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먼저 제의한 저의가 뭘까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사실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는 그동안에도 남북 간의 접촉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래도 남북 당국자 간의 만남을 직접 요청을 한다는 것은 기대를 하셨습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사실 이것은 외교통상부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박선영 위원** 모든 문제가 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고 힘드시고 조심스럽고 그러신 건가요, 지금?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이것이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대북 관련해서는 통일부 소관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박선영 위원**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통일부는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6자회담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관련해서는 계속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남북한, 중국이 만나서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박선영 위원** 남북한,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남한 당국에다가 직접 만나자고 얘기를 이렇게 9월 중순 쯤에 추석 지나서 하리라고 예상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산자료 주신 것에서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런 대북정책의 기조도 없을뿐더러 참 통일정책이 부재하다, 그 자체가 없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몇 번 드렸지만 답변을 못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 까닭이 결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통일정책이 우리 통일부 전체 예산의 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 예산이요?

**○박선영 위원** 통일부 예산 중에 통일정책 예산이 전체의 몇%냐고요?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박선영 위원** 통일부의 주 업무는 정부조직법상 통일정책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통일부 예산 중에 통일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지도 지금 주무장관이 모르고 계세요.

단 1%입니다, 단 1%.

그러면 1% 통일정책 예산 가운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통일정책 추진 지원, 통일캐러반 운영, 정책고객 마일리지……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것도 통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는 직접적인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통일캐러반이 뭡니까? 지금 통일캐러반 운영에 4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해외에 저희 간부들이 돌아다니면서 대북정책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박선영 위원** 그게 어떻게 통일정책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일부가 통일정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고민도 없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또는 같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DJ정권이나 노무현정권처럼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인 관념이나 이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전시적인 행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짰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가 투명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원인을 저는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주민이 우리 법상 어떤 법적 지위를 갖나요? 북한 주민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뭐 저희들은……

**○박선영 위원** 북한 주민은 우리 법상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인도적 사업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도적 사업에, 지금 결산에 들어있는 것 보면 인도적 사업에 그들에 대한 사업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장관께서는 북한 주민이,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답변보다도 훨씬 더 앞장서서 나간 답변을 지금 해 주셨는데 인도적 사업의 결산 내용을 보니까 새터민정착지원, 이산가족지원, 하나원시설운영, 납북피해자지원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납북피해자지원도 그나마 원래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로 2억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세항의 제목을 인도적 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리고 우리 장관께서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탈북자나 또는 제3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인 사업은 전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정확한 계산과 추계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박선영 위원** 아니오, 지금 결산을 하는데 탈북자가 들어갈 수 있는 세목이 하나도 없는걸요. 새터민정착지원 아니지요, 이산가족지원 아니지요, 이산가족지원정보화사업 아니지요, 하나원시설운영 아니지요, 납북피해자지원 거기에 해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하나도 그 카테고리 속에 북한 주민이나 심지어 탈북자, 북한 주민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북한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하나도 우리 예산에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어요. 탈북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보내 주십사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처 간에 구분이 있습니다. 탈북자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다른 부처의 소관입니다. 지금 주로 외교부에서 해서 외교부 예산에 다 예산이 반영돼 있고 저희들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를 하나원에 집어넣어서 정착을 시키는 과정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실 수……

**○박선영 위원** 통일 정책 안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외교부 결산했는데요, 제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도 그 예산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물어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도대체, 지금 통일부는 외교부 탓을 하고 외교부는 없다 그러고 결산 항목에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 숨겨서 그 예산을 집행하시는지……

**○통일부장관 김하중** 틀림없이 외교부 예산에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박선영 위원**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윤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한나라당 윤상현입니다.

장관님께 대북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식량지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와 규모 나중에 결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50만t 중에 첫 번째 선적분 3만8000t이 벌써 해주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민들이 그 식량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밀을 보냈는데요. 북한 해군 병사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와 가지고 그 밀, 미국 식량지원분 밀을 가지고 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의 투명성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땅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마인드나 인프라가 없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사상과 물적 기반이 없어서 답답하지요. 이러다 보니 1995년 이래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가 대북지원

을 한 게 무려 2조 9972억 원입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나아진 게 없습니다. 북한 인민 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뭐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해서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장비도 주고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농업 분야에서 자립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인도적사업이라는 게 보면 주는 쪽에서는 뿌듯하게 느끼지만 받는 쪽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용을 하고 학습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 주지요, 농산물 주지요, 비료 주지요, 생활품 주지요, 의약품 주지요, 소 주지요, 종자 주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줬지만 지금까지는 보면 물자 중심의 하드웨어 지원이 아닌가, 물자 중심의 하드웨어 지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이 물자 중심의 하드웨어 지원이 북한 경제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프로그램을 기술 전수나, 장관님께서 죽 말씀하신 기술 전수나 교육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프로그램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북한 측만 동의를 하면 저희들은 그럴 용의가 있고 또 그럴 충분한 자본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북한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제의를 할 생각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경협사업에다가 지원사업을 패키지화한다든지 단순한 구호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술 전수나 교육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원조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방향 전환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장관님,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항목에 좀더 방향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알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다음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영탁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개성공단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력 확보 문제인데 북측은 자꾸 인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인력 문제 해결이 내부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입장인 걸로 아는데 주된 이유가 지금 뭡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우선 개성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2, 30대 여성을 계속 뽑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개성 근처에서 데려오려면 교통편이 나쁘고 또 데려오더라도 숙소가 마땅치 않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숙소도 지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고려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버스도 증차 시키려고 하고 있고?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버스는 곧 증차가 될 겁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북측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의지 표명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자기네들은 만일 숙소를 지어 준다면 가능한 빨리 인력 공급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버스 100대를 배치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봐 가면서 숙소 문제는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지금 북측이 개성공단 임금이 너무 싸다고 불평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지난번에 몇 월 달인가 보니까 최저인상분, 최고인상분인가요? 5% 임금인상에 합의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합의하셨는데 현재 북측의 요구는 어느 정도 올려 달라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 그것은 뭐……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는 현재까지는 노동규정에 나와 있는 5%, 일단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5%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예, 그 이후에 이제……

**○윤상현 위원**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 세칙에서 지금 협상 중인데 그것은 그런 임금 인상과는 달리 임금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한 협의입니다.

**○윤상현 위원** 단장님,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에 제공되는 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현재……

**○윤상현 위원** 한 3000만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정확하게는……

**○윤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불 되는데 이게 개성공단사업이,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3월에 북핵 문제가 타결돼야 개성공단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타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진전이 있으면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윤상현 위원**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하시겠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10월 3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특구를 해서 득본 것이 하나도 없다, 개성공단을 개방 개혁의 사례로 얘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개성공단사업이라는 게 김정일이 군부의 저항을 무릅쓰고 만든 곳인데……

1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치는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마무리해 주세요.

**○윤상현 위원** 그래서 김정일이가 개방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고 특히 현재 병상에서 차기 권력투쟁을 차단해야 되는 버거운 처지에 있는데 개성공단 유지에 적극 나설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제가 요새 듣는 얘기는, 수개월 전부터 북쪽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평양에서 조만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금강산관광이고, 두 번째가 개성공단사업이고 세 번째가 개성관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산관광은 일단 잠정중단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에 큰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환 위원님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나라당의 남경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WFP를 통한 대북인도지원과 관련돼서 추석 전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더 진전된 논의사항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없습니다.

WFP가 저희들 보고 얘기를 할 때 당장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11월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하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제가 추석 전에 상임위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 현황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지금 아무것도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인지……

**○통일부장관 김하중** 사실 중국 내 탈북자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인데 중국 정부가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줄 가능성도 희박하고 아마 그래서 실무진이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숫자를 포함해서 현황 그런 것들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현재 파악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단순히 정보가 어느 정도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이, 그 상황을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계속 해서 안 보내 주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또 이 상황들을 정리해서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알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실행이 부진하다라는 질의들은 많이 나왔을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개별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 다 통틀어서 집행률이 한 6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왜 이런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율 자체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정부가 출범해서, 2월 말에 출범해 가지고 첫 번째 결정한 것이 4월, 5월에 가서 비로소 첫 번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비해서 못지않게 저희가 모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더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특히 합동사업의 경우에 2007년도에 이렇게 눈에 띄게 30%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이 2007년도에 집행은 됐지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기는 2008년 예산에 반영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위원** 또 농업 분야의 경우에 특히 개발사업은 45%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개별사업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가 원래 그것을 빨리 하려다가 7월 11일날 금강산 사건이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강산 사건이 해결되는 즉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또 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기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많이 받으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다른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이나 방향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제도적인 것이 전에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거쳤는데 금년부터 세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것 외에 민간단체의 물품구매 계약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 통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전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남경필 위원** 그런데 물품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계약의 투명성과 가격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게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들어서 전부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아, 2008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남경필 위원** 그러면 이건 2007년도와 달리 새 정부 들어서 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개선된 거네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개선된 거지요.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성공단 사업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건설사업 예산 715억 원 중에서 384억 원이 집행됐고, 집행률이 53.7%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예산 234억 원 중에서 61억 원 집행, 집행률 26%.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히 인력수급 해소를 위해서 남북이 합의를 봤던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사업 이게 예산 182

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액이 북측과의 합의 지연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작년 12월에 1만 50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2008년 초에 부지측량, 지질조사 거쳐서 올 상반기 중에 착공키로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남북대화 단절로 해서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수가 현재는 3만 3000명이 넘고 있는데 개성의 가용인력 풀이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입주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이 끝나는 2010년 말에는 총 한 1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필요한데 인력수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9월 10일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과거에 자신이 현대건설 근무할 때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개성공단에 다가 기숙사를 지을 경우 근로자들이 집단화해서 노사갈등 및 남북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발언 들어 보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들어 봤습니다.

**○문학진 위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지 저는 이걸 듣고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대통령의 인식에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최근에 대북 사업하는,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한 기업이 북측 근로자들하고 우리 근로자들하고 좀 언쟁을 하다가 지금 공장 조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체제가 다른 남북한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우려하신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상당히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 밖에 없는데요.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공히 인식하듯이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활로이고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요. 이게 크게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문학진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7, 80년대 현대건설 사장 류의 발상으로 노동자는 기숙사에다 모아 놓으면 집단화해 가지고 노사갈등을 일으킨다, 이 발상 자체가 저로서는 아주 엉뚱하고 좀 황당하고 참으로 기상천외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장관 견해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명, 몇십 명 있는 기업에서도 한곳에 있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생기니까 1만 5000명, 2만 명씩 모이게 되면 더 큰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잘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이 숙소가 매우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그걸 크게 봐서 숙소를, 또 남북 간에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지금 입장이 작년에 남북이 합의를 했으니까 남측이 숙소 공사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쪽은 합의 이행을 위해서 당국 간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지요.

**○문학진 위원** 저는 우리 쪽에서 숙소 건설에 착수해서 당국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그런 역발상을 할 필요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어서, 600억 원이나 들여서 큰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준공하기 한 달 전에 금강산 사건이 나고 또 그 전에 벌써 한 4, 5월대에 이미 북한이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철수시키라고 해서 철수시켰습니다. 사실 저희가 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집을 다 지어 놨는데 북한이 하루아침에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를 보면서 과연 이 숙소도, 이게 지금 삼통도 해결이 안 되고 이산가족

면회소 저렇게 훌륭하게 지어 놓은 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생각할 때 역시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학진 위원** 평통사무처장,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수석부의장, 부의장, 운영위 간사, 상임위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위 간사 이런 사람들한테 활동비가 나가고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문학진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를 보면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에 대한 지급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매월 이 사람들한테 정액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수석부의장 매월 550만 원, 부의장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매월 정액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급여지요, 급여.

그래서 직접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지출한 경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우리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는 평통법 제13조 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있는 건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5조는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지역을 참작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석부의장은 월 55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에 저도 취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러면 27년 동안 어떻게 해 왔느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석부의장은 상징적이지만 그리고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민주평통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법정 회의체와 지역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 국회에 평통법을 개정해서라도 조금 현실성에 맞게끔 추진을 한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이게 매월 정액으로 가니까 봉급처럼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문학진 위원** 원래 이 취지는 활동한 데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지금 이런 식으로 매월 정액 방식으로 나가면 활동비가 매월 그렇게 똑같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문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칩시다. 고칩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요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감사합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근거하면 남북협력기금을 받아 가는 민간단체에서 기금사용계획서하고 사용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박진 위원장,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지요.

**○송영선 위원** 아까 보니까 민간인들이 좀 엉뚱한 짓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송영선 위원** 세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용계획서에는 더 엄격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금사용결과보고서가 제출 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금융권은……

**○송영선 위원** 거의 2007년 기준으로 하면……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100% 받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송영선 위원** 63.6%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가 되지요?

결과보고서 제출 실적은 63%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이게 국가 예산으로 운용이 되는데 지금 보면 계획서를 내는 데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데 결과보고서 안 내면 그만이에요. 여기에 대한 응징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지금……

**○송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속되게 말해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안 써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계획서에 대한 심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협력기금으로 제대로 안 쓰였을 경우에는 자체 내의 시행령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건 엄격해야 됩니다. 이거 세금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64% 같은 게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말 것을 내년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개선되었으면 100% 결과보고서를, 100%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개선이면 곤란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건……

**○송영선 위원** 실제로 제대로 쓰였느냐 검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대북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북 식량차관 제공사업에서는 분배 투명성 확보가 꼭 필요한 것 인정하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송영선 위원** 우리가 쌀을 주느냐, 강냉이를 주느냐 밀가루를 주느냐 얘기가 사실은 쌀이나 통밀은 군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꾸 강냉이를 주자고 그러는데 투명성 확보라는 항목이 없어요.

작년에 보면 차관 제공사업에 인도경비로 약 1억 6600만 원이 쓰였는데 이게 순수하게 인도요원 213명과 모니터링 요원 40명에 대한 경비만 포함된 것이지 어떻게 분배 투명성이 확보됐는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분배됐는지 알 수 있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200명 따라가고 모니터링 요원만 40명 따라가서 분명히 투명하게 분배됐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주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자꾸 보수들 쪽에서는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다시 예산확보를 하시든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다음에 북한정보 분석관리 예산이 4억 2000만 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송영선 위원** 그것은 북한정보 분석은 아니지요. 남북정책, 소위 말하는 통일부……

어제 외교통상부도 똑같았습니다. 3억 9000 가지고 안식년, 서배티컬 이어(Sabbatical Year) 가는 교수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300만 원 주고 500만 주고 3000만 원 주고 소위 말하는 연구 하나 해라 해 가지고는 그냥 결과보고서 하나 던지면 그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 지금 전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통일부가 북한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니까 정확한 정보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갖기를 전부 희망하고 당연히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정보분석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통일부 믿고 있다가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분석에 대해서 국정원도 하고 정보사도 하고 기무사도 하고 다 정보를 확보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통일부만의 북한정보 획득과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내는 정책보고서 이것 1년 지난 것 가지고 통일에 대한 자료, 데이터 축적하고…… 이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북한하고 거의 1년에 5, 60번씩 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접촉과 또 직접적으로 북한에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장관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만약에 그렇게 자랑하신다면 제가 지금 통일부의 정보상태에 대해서 폭로할 게 있습니다. 식량이 도대체 북한에 무슨 기준으로 주고 얼마만큼 모자라느냐 하는 자료를 제가 석 달 전부터 요구했는데 86년도에 배급량을 546g으로 한다는 기준밖에 없어요. 노인하고 어린이하고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고 생산량은 매년 한 400t 되는데 얼마를 주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다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산을……

정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북한…… 걔들이 얼마를 배급을 받는지 모르겠다 통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 아주 세세한 것 같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새터민 정착 지원에 예비비가 거의 6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하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850명 더 넘어왔다.'

참 무책임한 답입니다. 7, 8년 전부터 죽 해 보면 매년 200명 내지 800명이 늘어가는 추세인 것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추정을 못해서 작년 기준으로 했더니 돈이 60억 더 부족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책에 대한 예측 메커니즘을 안 가지고 있고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옹색한 답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예비비 끌어들여서 정착 지원하는 데 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상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성공단의 총생산량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생산된 것이 얼마 되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4억 불 정도입니다.

**○송영선 위원** 4억 불이지요? 4000억 원어치를 생산했는데 실제로 판매된 것이 얼마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다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판매가 된 게 아니라 대외수출은……

**○통일부장관 김하중** 수출은 8400만 불 됐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소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송영선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이따 추가하시지요.

**○송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질의부터 추가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에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정보 수집 관련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전히 그쪽으로만 쓸 수 있게 된 것이?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정보분석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한 4억 6000 정도 됩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은 어떤 식의 정보수집을 하는 데, 어떻게 수집하는 데 쓰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주로 전문가들하고 학자들 접촉하고, 북한 전문가들 말씀입니다. 그런 데 쓰는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글쎄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통일부에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이 인원이 많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정보수집하기가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회담이라든가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막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들어가서 회담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들이 그것은……

**○권영세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뭐 학자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정보수집을 한다라는 것이 대단하게 정보수집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부에서 독자적으로 정보수집역량을 기르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각 부처가, 국정원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풀로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방금 전에 질의하신 송영선 위원님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원도 확 줄어 있는 통일부에서 무슨 정보수집을 더 확실하게 한다 이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도적지원사업으로 2272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중에서 무상지원하고 그다음에 차관 형식의 유상지원하고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바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인도적지원이 작년에 2271

억 원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중에서 무상으로 지원된 것하고……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중에서 융자 차관 형식으로 간 것이 1404억 원입니다. 작년에 인도적 총사업이 3억 9000……

**○권영세 위원** 아니, 유상으로 된 것이 몇 %이고 무상으로 된 것이 몇 %냐 이런 얘기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5 대 3 정도 됩니다.

**○권영세 위원** 나머지 2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나머지는 이산가족 교류입니다.

**○권영세 위원** 2272억 원 중에 이산가족 지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닙니다. 이산가족은 260억……

**○권영세 위원** 내 얘기는 인도적지원사업 2272억 원 중에 무상지원한 것이 몇 % 정도 되고 유상,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것이 몇 % 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2271억 원은 전부 무상입니다.

**○권영세 위원** 전부 무상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전부 무상이고 융자가 1404억 원입니다.

**○권영세 위원** 융자가 1404억 원 정도……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리고 이산가족이 270억 원 정도 되어서……

**○권영세 위원** 인도적지원은 지금 전부 차관 형식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아닙니다. 5 대 3 정도 비율입니다, 지금.

**○권영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272억 전부 무상지원 중에 곡물은 대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식량은 전부 저희가 차관으로 했기 때문에 1404억 원이 전부 식량차관입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곡물은 그러면 2272억 원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세 위원** 그러면 그 2272억 원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비료가 960억 원, 국제기구 지원이 208억 원, 민간단체 지원이 204억 원, 영유아 지원이 130억 원 그다음에 대북 수해지원 이것이 765억 원 갔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곡물지원은 전부 유상으로 간다 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전부 유상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곡물로 지원하는 천사백몇억 원은 전부 당국자 간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NGO를 통해서 지원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전부 당국자 간 지원입니다.

**○권영세 위원** 전부 당국자 간 지원이다?

지금 유상지원, 전부 당국자 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모니터링합니다.

**○권영세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매 10만t마다 저희가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가서 합니까?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이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저희 인도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인도협력국장 천해성** 인도협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 차관 제공하면서 현재는 매 10만t마다 동서해 지역 해서 총 다섯 군데씩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군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 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 모니터링 요원은 지금 누가 데려갑니까?

**○통일부인도협력국장 천해성** 모니터링 요원은 저희 통일부하고 한적 그리고 유관 부처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모니터링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도부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인도협력국장 천해성** 2002년도 쌀 차관 제공 때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이 가서 하는 모니터링 외에도 저희가 10만t마다 분배결과 통보를 아울러서 받고 있습니

다.

**○권영세 위원** 곡물은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쌀과 기타 잡곡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인도협력국장 천해성** 저희가 쌀 차관 제공은 전부 쌀입니다.

**○권영세 위원** 천사백몇억이라는 것이 전부 쌀이었습니까?

**○통일부인도협력국장 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다른 곡물은 지원 안 합니까?

**○통일부인도협력국장 천해성** 이때는 전부 쌀이고, 다만 아까 장관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인도적지원사업 중에 일부 민간단체 지원이라든가 영유아 지원에 조금씩 다른 곡물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할 때도 일부 곡물이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는 쌀 차관 제공은 전부 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송영선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영유아지원 이런 것을 쌀로 해야지 거기는 잡곡으로 주면서, 우리가 다섯 지역에 20회씩 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 개성, 고성, 해주, 홍남, 청진, 남포, 원산…… 수없이 많은 지역에 다섯 명이 가 가지고 20번 방문해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인도적인 내용이 되려면 전용이 쉽게 되는 것보다는 쌀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옥수수라든지 그런 잡곡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NGO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WFP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통일부보다는 WFP가 훨씬 더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위원장대리 문학진** 정리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 실질적으로 북한의 필요한 사람한테 그야말로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를 갖춘 WFP 쪽에 상당히 많은 곡물을 지원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에서 앞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북한 체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남북협력기금 중에 경수로사업 관련 질의를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경수로 관계 사업에 우리나라가 들인 돈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11억 3000여만 달러로 1조 3600억가량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 10월에 소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그 관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94년도에 경수로 협정과 관련돼서 체결된 제네바 합의는 대체하여야 되겠다, 또 중유 공급도 중단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다음 해에도 막대한 자금을 경수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경수로 사업에 투자한 걸 보면 2000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도에 3259억, 2001년도에 3002억, 2002년도에 3008억, 핵 위기가 발생해서 미국이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2003년도에는 3287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투자가 좀 줄어들었는데 우리도 그다음에……

경수로 사업을 KEDO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두 번에 걸쳐서 했더군요. 그런 사정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이범관 위원** 그런데 공사중단 조치를 했는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다음 해에 869억, 2004년도에 공사중단 조치를 결정할 때입니다. 또 2005년도에도 역시 공사중단 조치를 결정했을 때인데 228억…… 869억, 228억 이런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건 뭐에 쓰인 돈인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전부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때부터 이자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이범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작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원금상환은 5330억을 하고 이자상환을 1000여억 하고 그랬던데요. 이 돈은 한전에서 받아 갖고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전부 국채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국채 발행했던 것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한전에 대출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1조 3000억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 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돈 아닙니까? 금년 추경할 때 1조 원 한전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끌벅적할 정도인데 그에 버금가는 돈을 한전에서 지금 손해 봐서 이거 보전해 주는 금액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이런 것이 지금 전기요금 인상 문제나 이런 문제와 연관이 돼서 이것 좀 따져 봐야 됩니다. 막대한 국고를 손실했으면…… 제가 외교통상위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 드리는 게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거 형법상 배임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따져 보면, 아까 청문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여기에 쓴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북지원 문제가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3000여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 줘 가면서 해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하여튼 저희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저는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너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우리 국가의 손실이 얼마고 지금 한전에 1조 상당의 추경을 해 주는데 그 이상의 돈을 여기다가 지금, 한전을 통해서 지금 손실을 일으킨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

**○이범관 위원**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전이 KEDO가 소유하고 있던 기자재를 전부 인수하고 그 대신에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일괄청산 방식으로 그렇게……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청산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한전이 기자재를 처리하는 작업은 다 완료가 되고, 현재 구체적인 손익 산정하고 사업비가 확정되는 게 내년 12월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명확하게 어떤 것이 나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청산 진행절차 실적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핵심 설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핵심 설비라고 보는 것이 원자로발전기, 터빈발전기로 한 7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전부 한전이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건 지금 어디 있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한전이 받은……

**○이범관 위원** 국내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원자로는 국내에 있고요. 터빈은 지금 일본에서 인수했는지, 그건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처분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 언론에서도 이거 완전히 쓰레기가 돼 버렸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게 어느 게 사

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한전에서는 처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범관 위원**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 좀 다른데요. 한전에서는 그 사업 종료 당시인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질의에 대해서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핵심 설비를 처분하면 밑지는 것 없다 그랬는데, 엊그저께 한전 사장이 기획재정위인가 어디 나와서 한 내용으로 보면 이게 매년 110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2010년의 경우에는 폐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보고서가 공개된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쓰레기 되는 거 아닙니까? 보관비만 들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한전에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이범관 위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지금 처분이 가능……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경수로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명학교라는 새터민 대안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바로 여기 남산에 있으니까 장관께서도 한번 시간 나시면 차관님이나 누구 한 분 보내서 실상을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새터민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한겨레학교에 중점적인 지원을 해 주고, 교육부에서 10억 이상 지원해 주고 통일부에서도 약 30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명학교와 같은 그런 새터민 대안학교가 전국에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에 지원하는 총액이 불과 6000억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학교당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들, 뜻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학교의 또 하나 문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정상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또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들에게…… 스무 살 넘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육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학생들에게 일정한 생활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생활지원금이 어떨 때는 37만 5000원,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 그런데 인가를 하는데 상당히 스탠더드가 높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걸 좀 낮춰 가지고 인가를 시켜 줌으로써 꼭 그 생계비가, 지금 거기서 얘기하기는 37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부모가 있는 경우와 혼자 있는 경우는 또 다르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새터민의 경우 약 40%가 서울에서 산답니다. 서울에 살면서 통학을 하면, 도시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통학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 우리가 학교 교문을 왔다갔다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모가 닳듯이 말이지요, 북한에서 폐쇄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도시에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사회적인 교육이 되고 적응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한겨레학교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고 다음 주에 가 볼 생각입니다만 비교적 기숙형 그리고 농촌형,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북한에서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 왔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오히려 폐쇄적인 어떤 농촌형·기숙사형으로 간다면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도시형, 도시에 기숙사를 일부 만들어 주든 또는 통학이 가능하게 하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정부가 일일이 돈을 대서 만들기 힘들다면 미인가 대안학교도 인가를 하게 해 줌으로써 자연적으로 클 수 있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코멘트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도 지난주에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시설이 아주 좋고 맞춤형 교육을 해 가지고, 하여튼 새터민 학생들로서는 정말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시설도 좋고…… 저도 돌아와서 저희 간부들하고 걱정을 한 것이 사실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아주 좋은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대안학교라든지 청소년 생활본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시설도 충분하지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좀 빈약하고 또 정부 지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저도 올해 첫해입니다만, 18대 국회 초반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을 우리 정부당국과 국회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여태까지 봐서는 실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졌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 맡기고 제대로 지원을 못 해 준 부분도 많다……

그리고 지금 1만 4000명 정도의 새터민 중에서 우리가 10%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것, 육체적인 것 뭐 탈북을 하면서 중국에서 몇 년간 헤매고 어디를 다니며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상처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고, 제대로 우리가 그걸 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어디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 정말 180도 딴 판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하는 북한에, 무상원조 부분이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남북협력계정사업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 이것은 장관께서도 여러 번 답변을 하셨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른 사업 운영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핵 문제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들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남북협력계정사업들 중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도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민족공동체 회복지원대출, 그러니까 경협사업 중에 대북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2003년도 사업비 중에 64억이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2006년까지. 그래서 2006년에 집행이 됐지요? 장관님, 그러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이런 사업계획이 3년 동안 계속 이월되어 왔고 이런 사업들은 미리 예단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사업 타당성이나 무슨 적정성 이런 분석보다는 매년 그냥 타율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불용 규모가 저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보지요. 통일부의 2007년 결산을 보면 말이지요, 새터민 정착지원 예산은 100% 집행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그리고 예비비도 한 60억 되는 것을 100% 집행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그런데 체년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는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장관님 그렇지요?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추세인데, 올해 입소 기준인원을 1680명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그러면 실제로 2530명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맞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래서 900명 정도가 또 증가했어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이것은 2004년도에 1894명이 들어왔고 2006년도에 201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2007년에 1680명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유치원생이 봐도 이런 추세로 간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도 예측 못하고 예산을 수립하니까 계속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물론 지금 계신 장관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일부가 말이지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신중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런 데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한 가지 좀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그동안에 예산 당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요청을 해도 저희 요청을 듣지 않고 무조건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강력히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현실화를 시켜 주기로 예산 당국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상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상찬 위원** 분명히 행정부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예측이 가능한데 말이지요, 계속 불용액 남기고 말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것은 정말 시정하셔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장관의 잘못은 아닙니다.

또 경제협력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2007년도에도 불용액이 958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이게 경제협력기반조성사업은 말이지요, 전 정권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 또 개성공단 기반시설공사 이런 큰 사업과 별개로, 정치적 현안과 별개의 성격이라고 막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통일부?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그런데 이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측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것들도 예측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장관 뒤에 계시는 우리 통일부 직원들이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통일부.

그래서 이게 결산 국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라기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이다음 예산편성 시에 반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적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또 본 위원이 2007년 결산에서 보면 남북협력계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참여정부가, 전 정권이 통일부에 쏟았던 관심이 말하자면 잘못된 관행을 만들지 않았나,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고 또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용액들, 이런 것들은 정말 통일부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통일을 준비하는 예산인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타성으로 말이지요,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되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불용액이 또 남고 말이지요.

이래서 통일부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장관 이하 통일부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우리 김대식 처장님 놀고 계신 것 같아서……

중국 자문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에 관련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자문위원들은 미국, 캐나다, 또 전 세계 각처에 많이 배정되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구상찬 위원** 그런데 제가 당에서 혹은 이런

정부에서 중국 심부름, 여기 앉아 계신 장관님이 중국 전문가이시지만 저도 당에서 심부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중국 자문위원들은 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우리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 지리적이나 재외동포 수를 감안하면 중국에 협의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하고 우리가 각 공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하고 업무 협의한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몇 차례 이렇게 했는데, 중국 정부에 대한 위촉을 위한 활동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한·중 전문가포럼을 개최해서 위촉 문제를 논의했고 앞으로 중국 내 자문위원 위촉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또 한·중 우호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좀 이해를 시키고, 제가 다음 14기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이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상찬 위원**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나 동포들에게는 대단한 영광이고 또 그분들의 자긍심을 살려 주는 그런 직책입니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재외동포들이……

**○위원장 박진**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상찬 위원** 재외동포들이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회의에 참석하고, 물론 지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자비를 들여서 참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은 해외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민족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빠지지 않고 다 자문위원들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중국 동포들에게 아직까지 자문위원을 선정…… 물론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중국 정부를 설득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은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우리 구상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자문위원 구성할 때 또 중국통이시니까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와 민주평통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찬 위원님 시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박주선 위원** 지금 현재 위원이 1만 6791명으로 되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박주선 위원** 이게 대통령자문기관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박주선 위원** 민주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대통령자문기관인데 이게 자문기관이 회원 인원수가 1만 6791명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사무처장 입장에서도 이것은 비능률·과비대화가 된 기구라고 생각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저도 평통 위원을 3기에 걸쳐서 해 본 경험이 있고 그런데 여기의 자문위원 숫자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1만 6791명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지금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한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1만 6791명이라는, 대통령자문기관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것은 지금 일부 견해는 많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좀 적다고……

**○박주선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법 2조에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정

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자문에 응한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몇 번이나 했고 건의내용이 뭐고 그것이 대통령 통일정책에 반영이 된 일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자체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못할 테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이 자문회의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가 없었던 내용인데 자문회의 덕택에 통일정책에 반영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제가 지나간 것은 잘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이번에 7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연설 때 우리가 이틀 전에 자문 건의를 한 것이 상당히 정책에 반영됐다 이렇게……

**○박주선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영……

**○박주선 위원** 그러면 1년에 13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을 하고 국내외에 1만 6791명의 위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 조직에서 그것을 건의를 안 했더라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갈 뻔 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자문기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대통령의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의 내용이 그야말로 긍정적이냐 효과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선 위원**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제가 6월 2일날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스터디도 해 보고 공부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문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북통일의 기반조성과 또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부적인 이런 갈등 이런 것이 또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통일자문회의가 2년에 한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전체회의가 2년에 한 번 개최되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가 1년에 1회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 수가 300인 이상 500인 이하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박주선 위원** 그리고 또 지역회의가 있고 지역협의회가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박주선 위원**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는 연 몇 번 개최를 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지역회의는 1년에 한 번 전체회의를 하고 있고 또 협의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 법상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록을 전부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회의록이 작성이 돼 가지고 지역협의회나 지역회의나 평화통일자문회의 본회의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회의록 작성은 운영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만 한다는 말이 없어요, 법에 보면. 회의록 작성하는 내용이, 27조에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상임위원회만 작성하라는 법이 없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것은 전체회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공부가 덜 됐는데요, 하

여튼……

**○박주선 위원** 그래서요, 회의록을 보면 과연 이 지역회의나 지역협의회나 통일자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정말로 이 제도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으로 건의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박주선 위원** 그래서 1기부터 13기까지 개최된 회의마다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는 회의록의 내용을 발췌를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대통령이 역으로 통일자문회의에 자문을 의뢰한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이 자문한 횟수, 자문의 내용, 자문에 대해서 이 통일자문회의에서 그에 대해 답변한 내용 그다음에 답변을 하는데 하려면 적어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동안 지역회의나 지역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자문할 것에 대비하고 미리 전부 다 의견을 종합해 놨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그냥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대통령한테 자문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실적이 아닐 겁니다.

지금 7월 11일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6·15 정상회담과 10·4 정상회담 이행 합의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자는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 회의 때, 어느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건의하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2/4분기에, 7월 4일날 우리가 해서……

**○박주선 위원** 무슨 회의에서 그랬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이것은 우리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박주선 위원**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요.

**○박주선 위원** 무슨 분과위원회에서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우리 기획정책분과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헌법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기구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상에 있는 자문회의가 국정자문회의도 있고 경제자문회의도 있고 안전보장회의도 있고 과학자문회의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 말이 회의이지 1만 6791명이 들어온 회의는 대회지 회의가 아니지 않아요, 그게?

(박진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20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중에서 130억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다 할지 몰라도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의 정치 사조직이고 비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법 폐지 문제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운영을 할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대식 사무처장께서 회의록도 점검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자문회의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 말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黃震夏**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9월 9일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건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에 대해서…… 통일부가 최근 현황 관련 보고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9일날 이후에 여기서도 밝혔듯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건강이상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과장되게 보도되었고 또 선정적으로 보도되었고 이것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한다면 참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 현황 관련 보고를 통해서 장관께서는 언론보도라는 말을 수차례 인용하시면서 언론이 너무 과잉으로 보도했다 하는 것을 좀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언론한테 결국은 누가 정보를 주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여러 소스에서 정보가 나가서 그것을 언론에서 또 확대해서 보도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입장을 보여주신 분이 통일부장관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때도 정부로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성호 국정원장이 '뇌수술을 했다, 부축하면 걸을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또 12일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었다'라는 얘기도 제가 아침에 신문보도 보면서 정말 혀를 찼습니다. 정말 경박하고 경솔한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회에서도 또 이런저런 불필요한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통일부에서 장관님께서 현황 관련 보고에서 딱 정리해서 내주셔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내에 정보관리시스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표되어야 되는지 하는 창구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 국회에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셨듯이 정부 내의 국무회의에 가셔서도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해서 정말 좀 유감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9월 10일날 대통령님 모시고 저희가 이 회의를 하면서 그때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에 관한 문제는 통일부가 전담을 해서 설명을 하고 언론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에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진전 상황을 설명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다 저희 통일부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유념을 하고 또 기회가 나는 대로 제가 다 그렇게 충분히 전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위원장님을 통해서 여러 여당의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좀더 잘 숙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가집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행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문제부터라도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내 주신 자료는 받았는데 우선 통근버스 100대 추가 투입하는 문제는 5월달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00대 추진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곧 아마 저희가 구입해서 배치할 겁니다.

**○이미경 위원** 실현될 수 있는 걸로 나타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이미경 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운용 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통일부 주관 국정과제 중에서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100일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초기 과정 단계에서 그동안에 좀 밝힐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투명성을 자꾸자꾸 높여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남북협력 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산을 보면 너무 대분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과목 하나하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까지를 다 대분류로 설정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하는 것을 정말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교류행사의 사업비용,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사업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각목명세서에서 지출을 밝힐 수 있는 게 가능한데도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 집행이라든지 통일부의 주요사업이라든지 보면 남북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남북 경제협력 이런 것은 모두 같은 내용인데 통일부 주요사업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에 가서는 그냥 그것이 대분류로 끝나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약속하셨듯이 투명성 강화에 맞추어서, 100일 이내에 하시겠다는 것에 맞추어서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내년 결산에서는 보다 더 개선된 상태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저희가 북한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심의과정에서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 상세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아, 그 전에 비공개회의에서는 보고하셨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보고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면 보고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려면 볼 수는 있겠군요, 또 다시.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추가로……

개성공단의 아까 보고를 보니까 지금 개성공단에 의료시설을 하나 해 두었거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린닥터스……

**○정의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협 자금에서나 어디에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어 가지고……

**○통일부장관 김하중** (뒤를 돌아보며)

그린닥터스……

**○정의화 위원** 예, 그린닥터스가 하고 있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개성지원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예, 말씀하세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그린닥터스가 민간 NGO…

**○정의화 위원** 제가 공동대표입니다.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따로……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의화 위원** 없습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예.

**○정의화 위원** 앞으로도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그것은……

**○정의화 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난번에 그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희가 앞으로 매칭펀드로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委員長代理 黃震夏**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희망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분이 계신데 추가적으로 의견이 없으시면 이 네 분만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차 질의 때와 같이 7분 동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국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장관님 피곤하실 텐데 보충말씀 몇 가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사정이 지난번 6자회담이라든가 북미 관계가 잘 진행될 때라든가 또 금강산 피격 사태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긴박해졌다고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면 전략과 전술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있고 특히 장관님께서 주도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게 있고 국제사회가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관님하고 대통령께서만 마음을 먹으시면 이미 김정일 위원장과 기본적 합의를 봤던 것은 대개 북한 체제하에서는 쉽게 재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강산의 공동관리기구, 개성사업관리기구 이상의 그런 것과 이산가족면회사업은 명분도 있고 이미 합의했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장관님께서 결심만 내리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우선 이산가족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 간에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 측에서 지난 3월에 당국자 접촉을 중단시키면서 적십자사 간의 접촉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십자 측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어떤 계기가 형성되어서 당국자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문제, 금강산관리위원회의 구성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의 숙소 문제하고, 버스로 다니는 것보다 결국 숙소를 지으셔야 될 테고요. 2단계 사업을 착수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활로이고 또 한반도 경제의 활성화, 또 남북의 긴장 완화 이런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 생각을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강산사건이 터지면서 금강산에 그동안 2년 동안 600억 원을 들여서 지어왔던 이산가족면회소 이것을 지어놓고 거기 관계된 사람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대아산에서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엄청난 돈을, 엄청난 정력을 투입해서 했는데 북한이 하루아침에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개성공단 숙소 문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강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여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중소기업에도 큰 희망이 되고요, 또 국민들한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미국 쪽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테러지원국 해제거든요. 원래 계획은 올해 안에 할 것이었고 대표부 설치가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의원외교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하도록 외교부와 통일부가 협력해서 미국에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보다도 외교통상부에서, 또 여기 한미의원협의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국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국현 위원**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는 원래 미국이 약속했던 것이거든요. 또 우리 경제 지원이 약속만큼 못 가고 있는 우리 측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서 한 번쯤 장관님께서 외교부장관과 함께 앞장서실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국제사회가 할 역할 중에서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 매년 국가원수가 한 100명 모이시고 기타 세계적인 지도자가 한 1000여 명 모이시지 않습니까?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이 세계경제포럼이 그리 멀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대통령께서 가시든가 아니면 국회의장이 가시든가 하고 통일부와 외교부장관님께서 가셔서 북한 세션(session)과 남북한 교류와 협력 세션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서 국제적 지원과 관심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대화의 말미를 얻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

고요, 그 말씀을 유념하고 제가 또 관계부처 장관이나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특히 만일에 세계경제포럼과 WFP, UNEP, WCCD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하면 식량 원조와 북한의 산지 복구, 수해 방지, 농토 복구를 통합시킨 국제적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량 원조를 좀더 과감히 하시는 길에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고 조림사업과 연계를 하신다면 아까 우리 남북한끼리만 조림사업과 수해 방지와 농업 복구, 식량 원조, 비료를 연계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시너지가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하여튼 저희가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시면 2010년 세계임학대회가 한국에서 있는데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올림픽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이 이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이런 계획을 국가계획과 민간계획을 세계임학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때 활용하시면 장관님께서 한반도에 큰 기여를 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문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북정책이든 다른 정책이든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선이 굵직하고 무겁게 죽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남북관계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데 대해서 평소에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해 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이러저런 과정으로 굉장히 경색이 되어 있고, 물론 통일부장관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 분야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낮은 수준의 교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 내부에도 분명히 강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지만 의견의 대립도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제3국의 책임 있는 인사가 북한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소위 북한 내에서 대화를 해서 남북한에 물꼬를 열어 놓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현재 사정상 그렇게 본격적인 정부 간의 대화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이나 낮은 수준의 이런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입지 때문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전체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깔려 있어야 지난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연설하신 남북 간의 전면적인 대화, 진지한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말의 진정성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러한 민간 분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좀 낮은 수준의, 정치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은 오고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 모든 민간기구는 다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금강산사건 이후에 대규모의 대표단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 국내 여론을 의식하셔서 조금 시기를 연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한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앞으로 가시게 되면 저희가 웬만하면 다 허용을 할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는 저희가 허용을 합니다.

다만 북한이 고위당국자 간의 접촉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아주 고위 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레벨에서의 교류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케이스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허용할 생각입니다.

**○송민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남북 간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옳고 나쁘다 이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굴복을 하고 들어오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결국 서로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유념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지방정부라든지 민간 부문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송민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사실관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두 위원님께서 경수로 가지고, 며칠 전에 모 신문에 난 칼럼 같은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우리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실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2년에 미국이 중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경수로 중단을 말리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등 가지고 그때도 왜 계속 돈이 들어갔느냐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통일부가 정치적인 색깔 없이, 전혀 정치적인 컬러가 없이 있는 대로, 사실관계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은 알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맞습니다.

**○송민순 위원** 물론 지금 새 정부 출범 후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통일부가 정치적인 기류라든지 바람에 신경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 좋은 뜻을 품고 공직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사실관계는 제대로 내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심지어 경수로 때문에 전기값이 올라갔다, 한전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002년에 우리가 만약에 중단했더라도 위약금 때문에 돈은 그대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2007년부터 해 오던 계약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해 놓고 나가는 것이 좋겠고, 이 문제는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당파성을 떠나서 국가이익 전체를 먼저 잘 생각을 하시고 우선 통일부에서 이 문제에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위원님들께 공개든 비공개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놓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약 시작한 것을…… 1997년에 계약된 것을 계속 이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파기하면 위약금이 생긴다, 이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정의화 위원님께서 한겨레학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겨레학교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겨레학교 자체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잘 양성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설이 좋고 교육 내용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국내에서만 계속 자란 사람들도 가기 어려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겨레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하는 사회성 양성 이런 것도 같이 보완을 시키는 그러한 배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委員長代理 黃震夏** 예, 하시지요.

**○이미경 위원** 송민순 위원님이 경수로와 또 한전이 인수함으로 해서 손해 봤다 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제대로 자료를 밝힐 수 있도록 해라, 이랬는데 언제 하라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리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인도적 사업 질의하다가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탈북자의 지자체 이관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경기도나 여러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영 위원** 일부 언론 보도는 무기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최근에도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하나원에 오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경기도하고 어떻게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게 썩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박선영 위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도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설득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복안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하나원의 경우 탈북자 1만 명 시대 아닙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원에 가 보면 정말 비좁고 더 이상 건물이 들어설 공간도 없고 시흥에 분관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탈북자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남북출입사무소하고 경협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분리해서?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기능이 전혀 다르고요. 개성공단에 모든 출입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남북출입사무소이고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개성공단 내에서 북한 사람들과 만나 가지고 양측의 사업자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남북경제협력사무소입니다.

**○박선영 위원** 기능상으로는 장관 말씀처럼 그렇게 구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경제협력을 위해서 출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로 엮었을 때 훨씬 더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남북교역과 경협의 손실보조금이 지난해 100억이나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손실보조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박선영 위원** 보면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한 후에 강제수용이 됐다든지 송금제한이 됐다든지 당국 간 합의가 이행이 안 되었다든지 하는 아주 큰 카테고리로 규정을 하고 있고 명백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100억씩 지난 2007년도에 손실보조가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집행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약정체결 금액입니다.

**○박선영 위원** 약정체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상당히 민간업체들에 의해서,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오용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은 접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 보도는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박선영 위원** 확실하게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 투명성이 효율성과 함께 담보되고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달에 다른 조사기관도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인 행안부에서 중고등학생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했더니 6·25가 언제 났는지 그리고 6·25전쟁이 어떻게 발발을 했는지, 심지어는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을 주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미국이 1순위, 일본이 2순위 이렇게 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체계적이고 확고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학교 통일교육 지원이 3억, 그다음에 사회 통일교육 지원이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통일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학년기 이후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통일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인식

을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전체가 제대로 북한의 실상을 알고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교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박선영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시키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40명 정도 됐습니다.

**○박선영 위원** 36명 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박선영 위원** 그 액수가 3억 700만 원인데 행정기관의 국·과장급들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는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통일교육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놀러 다닌 사진들뿐이었습니다. 금강산 다녀오고 백두산 다녀오고 개성 다녀오고. 다른 사람도 아닌 행정기관의 국·과장급들한테 이런 교육이 과연 필요한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정보 분석·관리라는 비용이 뭔가요?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문서 구입비나 연구개발비는 전혀 없고 정통부에 들어 있는 임차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정보 분석이 제대로 되나, 오늘도 그렇고 일주일 전에도 장관께서 최근의 북한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로부터 질의도 받고 질타도 받으셨습니다마는 북한정보 분석하는 것이 이렇게 통일부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정말 장관께서 무엇을 알고 계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代理 黃震夏** 마무리해 주세요.

**○박선영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북한정보 분석은 통일부는 전혀 안 하고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받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문제는 안보 장관들이 항상 빈번하게 모여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서로 쉐어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게 쉐어하는 것하고 주무부처에서 독자적인 북한정보, 지금 예산에도 독립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독자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의 경우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총 예산 중에 회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1만 7000명이나 되는 자문위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회의비가 그렇게 많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송민순 위원님께서 경수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경수로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를 질의를 통해서 차례대로 밝히겠습니다.

경수로사업 시작해서 청산까지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대충 말씀하십시오. 국민들은 대부분 다 그냥 11억 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까지 총 1조 3700억……

**○송영선 위원**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잘 몰라서 그런지 제가 계산해 보니 12조 원입니다. 한국 분담 총액이 지금까지 사업 지출비로 들어간 게 1조 4000억……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은 뭡니까? 그게 98년에서 2006년까지 3조 6000억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은 뭐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국채 상환입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경수로사업 총 국채 발행액은 얼마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까지 1조 9715억 원입니다.

**○송영선 위원** 앞으로도 국채 발행 계획을 언제까지 하고 있지요?

차관님이 대답하십시오.

국채 발행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시지요? 2013년이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현재 KEDO가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그러니까 KEDO가 법적으로 엄연한 인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청산이 2011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국채 차환발행을 2013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현재 기재부에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송영선 위원** 2013년까지 할 경우에 국민 1인당 국채 차환발행 때문에 생기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888억 원입니다. 아기까지 합쳐서 국민 1인당 2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청산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청산 비용은 현재 한전에서 추정은 한 1억 불에서 2억 불 사이로 당초에 KEDO하고 상의했습니다.

**○송영선 위원** 1억 불이 아니고 1조 5000억 원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아니, 청산……

**○송영선 위원** 예, 청산, 그러면 1.5억 불로……

**○통일부차관 홍양호** 한전과 KEDO 사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1.5억 불로 돼 있는데 그게 한전과 KEDO 사이에 돼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KEDO가 2006년 5월에 경수로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해체는 2011년까지라고 아까 차관님도 인정하셨지요? 그런데 KEDO가 현재 북한에 대해서나 한전에 대해서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을 안 했지요? 했습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

**○송영선 위원** 확정 안 했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기본적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송영선 위원** 기본적인 게 아니고 KEDO 자체가 자기들이 추정하는 소위 말하는 청산비용과 한전이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원하고요.

그다음에 재원조달방안이, 우리가 지금 국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송영선 위원** 국채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이 전기료 할증을 해서는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민들 비판이 들끓듯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그 부분으로 한전, 이번에 1조 더 준 것도 사실 그것이고, 그것 아니면 복권 발행해서 수익금으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일반 재정에서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면 제일 좋은데 이건 턱도 없는 얘기니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자만 부담하고 원금은 국채를 발행해서 상환하고 있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99년에서 2006년까지 순국채발행액은 1조 9000억이고, 원금 1조 7000억이고, 이자가 4500억 원인데 이자만 돌렸습니다. 원금 못 돌렸어요. 원금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2013년까지 가면 원금이 얼마 되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한전이 KEDO 청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KEDO하고 한전하고 청산비용은 그동안 미지급금하고……

**○송영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원금이 축적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한전하고 KEDO를 구분하라고 저한테 하시지 말고……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동안 통일부와 기재부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국채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재정당국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그런데 국채인데 원금을 지금, 1999년에서 2006년까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원금 못 갚고 있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 자체를 재정당국에서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재정사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 계속 원금

은 축적이 된다는 거지요. 2013년까지 원금이 얼마로 됩니까? 원금이?

**○통일부차관 홍양호** 금액은 지금 제가 잘……

**○송영선 위원** 원금이 3조 60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급급한 게 뭐냐 하면 남북협력기금에서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경수로 계정비 내는 겁니다. 또 이자 내는 겁니다. 그 속에 물론 이자가 돼 있지만,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것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장관님, 차관님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자꾸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고 그냥 이자만 내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 북한이 내일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만나자 그럽니다. 빤합니다. KEDO 중단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2005년 9월 19일 합의문에 의해서 200만㎾ 전기 보내 준다 했지요? 당장 그 문제 논의하기로 만나는 겁니다. 국내 빚은 태산 같이 계속 쌓여 가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전기 보내 달라고 만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 빚을 모르고 전기 보내주는 것에만 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제가 의문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과대한 걱정을 한다면 천만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대한 걱정을 한다고 해도 자료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아니면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자료를 적나라하게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시고 더불어 200만㎾도 계산을 해 보니 어떤 데는 10조, 어떤 사람은 20조,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 16조 8000억이 나왔어요. 돈 그거 보내 주는 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맺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텐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또 계십니까?

그러면 구상찬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질문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구상찬 위원** 질의라기보다, 장관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맨 뒤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 준비를 못 한 게 몇 개 있어요.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원 증축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그게 지금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금년 말에 완공됩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진척상황이 반밖에 안 됐던데요? 50%밖에 안 됐던데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구상찬 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구상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액 대비 집행률이 14.6%입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국장께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하나원장이기 때문에……

**○구상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른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하고 이런 것 제가 한 세 가지 서면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통 사무처장님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주선 위원께서 평통자문위원들이 1만 6000명 정도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 질의 중에 중국자문위원들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더 늘려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박주선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줄이되 중국도 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잘못 오해하실까 봐 제가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들, 지난 번에 처음 나와서 취임인사 하실 때 자문위원들의 성향이나 분류를 잘 해서 과감하게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좋은 분들만 따로 모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 하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구상찬 위원** 제가 대체로 지역의 평통자문위원들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고 벌써…… 평통자문위원들쯤 되면 이렇게 저렇게 선이 다 닿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껏 하셔야지, 또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원래 생각하시던 대로 잘 안 되면 또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할 테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통일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과 또 질의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안상수 위원, 송영선 위원, 정의화 위원, 황진하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중에 송영선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께서 또 그리고 구상찬, 박선영, 남경필, 이범관, 박주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신속히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들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휴식 할 것 없이 다음 다룰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김소남·김학용·김희철·박종희·송민순·송영선·신지호·신학용·안상수·유기준·이범관·이한성·정두언 의원 발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용구·정희수·이상민·양승조·박상돈·이진삼·심대평·권선택·류근찬·이재선 의원 발의)

(18시05분)

**○委員長代理 黃震夏**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이명수 의원 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지성배**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진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자신이 북한이탈주인임이 인식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총 1만 4175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7551명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인 안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결과 안성의 주민등록 지역코드가 25임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125나 225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지역코드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임이 쉽게 인식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이로 인하여 비자 발급 등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코드가 25로 시작되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발급 시 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한 호적등본을 요구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국민들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5월 이후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일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정착 이후 각자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개별신청토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임을 식별할 수 없으나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여전히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등록번호로 말미암아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타인이 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과 동일한 주민등록번호 지역코드를 가짐으로 인하여 중국 방문 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입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제2항 본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하되 같은 항 단서에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경우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변경의 실익이 없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9조의3제2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부여 업무를 운용하고 있는 내부지침의 보완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현재 하나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부문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만 4175명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1인 세대 기준으로 정착기본금 600만 원, 주거지원금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보호담당관제, 정착도우미제 등의 제도를 통해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에 66개의 민간단체가 새터민 결연사업 추진, 무연고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방과후 공부방 개설, 자원봉사자 육성, 대학생 학업가이드 등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위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근거법률의 미비로 직접 지원은 없으며, 다만 법 제30조상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하여 39개 단체에 16억 6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에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민간단체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등의 지원 근거를 법안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代理 黃震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송민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송영선 위원님 하시고요.

우선 송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이든 누구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함으로 해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설정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충성 이것은 어느 나라 국민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 민간단체를 통해서 경유하면 그 이탈주민이 자기가 국가로부터 직접 이러한 배려를 받고 지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고, 따라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정의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학교시설 같은 특정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비적 의견을 제가 내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영선 위원** 저도 이명수 의원님 법률안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민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상당히 유사합니다마는 일단 이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몸뚱이만 가져와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마음자세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애국심이라든가 이곳 정착에 대한 어떤, 감사라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곳 생활에 젖어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엄연하게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한 다리를 걸쳐서 민간단체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한 문제와 같은 연계선상인데 아까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민간단체들이 기금사용 계획서를 내고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주 미비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소위 말하면 엄밀하게 대북지원 사업이나 새터민 정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나쁘게 말한다면 본 취지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것에 쓸 여지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실적도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세 번 정도 심사를 한다 해도 결국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런 지원을 할 경우에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으로 돈이 흘러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넘겨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진영 의원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주민등록번호가 '125' 또는 여자들은 '225'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미 2007년도 지난해 5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2007년 5월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아주 한정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입법기술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본조로 넣는 것이 아니라 부칙에다가 본조의 적용례를 넣는 것이 법의 모양새나 어떤 입법 기술적인 차원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의화 위원** 저는 송민순 위원님하고 송영선 위원님 두 분 존경합니다. 두 분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중에 법안심사할 때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도 반대한다고요.

**○委員長代理 黃震夏** 전부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부된 결산과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서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2일, 다음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26인)**

| | | | |
|---|---|---|---|
| 구상찬 | 권영세 | 김충환 | 남경필 |
| 문국현 | 문학진 | 박상천 | 박선영 |
| 박주선 | 박 진 | 송민순 | 송영선 |
| 신낙균 | 안상수 | 윤상현 | 이미경 |
| 이범관 | 이춘식 | 이회창 | 정몽준 |
| 정세균 | 정의화 | 정진석 | 진 영 |
| 홍정욱 | 황진하 | | |

**○청가 위원(1인)** 정옥임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구희권 |
| 전문위원 | 지성배 |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 | |
|---|---|
| 장관 | 김하중 |
| 차관 | 홍양호 |
| 기획조정실장 | 김중태 |
| 남북교류협력본부장 | 황부기 |
| 통일교육원장 | 박상봉 |
| 남북회담본부장 | 홍재형 |
| 통일정책국장 | 김천식 |
| 인도협력국장 | 천해성 |
| 대변인 | 김호년 |
|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 김영탁 |
| 남북출입사무소장 | 정영조 |
|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사무소장 | 김웅희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 고경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
|---|---|
| 사무처장 | 김대식 |
| 기획조정관 | 김영구 |
| 통일정책자문국장 | 장득순 |
| 정책연구위원 | 임학무 |